

박근혜 “노동개혁” NO!

기간제 연장, 파견 확대 중단하라

관련 기사 8~9면



“노동개혁” 저지 투쟁
총파업으로
민중총결기를
뒷받침하자

3~4면

영국 노동당
제러미 코빈의
승리와 시험대

5~7면

기존
사회민주주의의
위기와
새 개혁주의의 부흥

12~14면

시리자는
왜 실패했는가?

온라인 기사

한국사 국정화
새누리당 정부의
‘역사 전쟁’은
지배계급의 계급투쟁

16면

대학생이
피고석에서
당당히 말하다

15면

남북 노동자
통일 축구 대회

9면

누구의 말일까요?

“냉장고와 요리도구, 라디오, 컴퓨터, TV와 DVD”
영국 내무부가 발표한 난민 물품 지급 금지령

“남의 돈으로 사치하고 싶다. 그렇다, 난민이 되자”
난민이 세금 축내는 존재라고?
일본 극우 만화가 하스미 도시코

“동성애자들이 노리는 게 궁극적으로는 국가 전복이라고 확신한다.”
KBS 이사 조우석의 혐오스러운 발언

“역사 교육은 국가의 부정을 목표로 하는 좌파의 영향력을 일소해야 한다. 역사는 올바르게 해석된 공정성에 기초해야 한다.”
나치의 교육 강령

“과거에 역사 전공 학생들이 시위 때문에 학업을 잘 하지 않아 지금 역사 교육이 잘 되지 않는다.”
사학계 집필 거부를 꺾어내리고 싶은
교육부 장관 황우여

“아베는 극우 성향 교과서 채택 위해 겁 · 인정 실시. 하나로 만들면 그런 일 못해.”
새누리당 역사교과서개선특위 간사 강은희

“국사학자들한테 먼저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싶다. 무슨 원인이 이렇게 사무치나.”
물불 안 가리는 청와대 홍보특보 김경재

“교과서 준비를 못했다.”
주체사상을 담은 교과서를 보여 달라는
외신 기자들의 요구에 교육부의 군색한 변명,
있을 리가 있나

“[근무] 마지막 날 참고인으로 국정감사에 참석해 많이 쓸쓸하다.”
서울시에 차별구제 신청했더니 해고 통보받은
서울대 비정규직 노동자

wspaper.org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 보건의료노조
파업 찬반투표 압도적 가결,
총파업 투쟁으로 노동 개악 저지하자

★ 철도노조
김영훈 집행부의 임금피크제
잠정 합의를 부결시켜야 한다

★ 세월호 특별법 통과 1년 — “반쪽짜리”
특별법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정부
진상규명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TPP, 미국의 패권을 위한 자유무역협정
★ 그리스
시리지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

★ 폭격이 평화를 앞당긴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미국도 러시아도 당장
시리아 공습을 중단하라

★ 알렉스 캘리니코스 칼럼
제국주의 열강과 지배계급의
술책에 희생되는 쿠르드족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버니 샌더스의 “정치 혁명”에
기대를 걸 수 있을까?

★ KBS 이사 조우석은
성소수자 혐오 선동 중단하라

★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서
임금·노동조건 문제를 뒤흔들지 마라

단원고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

서지애 전교조 부천초등지회장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체제와 박근혜 정부의 매정함을 낱알이 드러냈다. 담임 교사로서 아이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둘러싼 논쟁이 대표적인 예다. 단원고의 고(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세월호 참사 당시 생존 가능성이 높은 5층에 있었지만, 학생들을 구하려고 4층으로 내려갔다가 학생들과 함께 목숨을 잃었다. 김초원 교사는 자신의 구명조끼를 학생에게 벗어주기까지 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다른 교사 7명과 달리, 두 교사는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도 순직 인정을 못 받고 있다. 살아서 받았던 비정규직의 차별과 설움을, 학생들을 위해 희생한 죽음 이후에도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김초원·이지혜 교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담임교사 중 30.4퍼센트가 기간제 교사이지만, 이들도 두 교사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순직 인정도, 유족연금도 받을 수 없다.

사실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에서 정규직 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차이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 비정규직 차별”을 끝내자 10월 16일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순직인정 촉구 결의대회’.

는 거의 없다. 더구나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학생들을 구하고자 했던 김초원·이지혜 교사가 진정한 교사가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진정한 교사란 말인가?

공분이 확산되자 국회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도 두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도록 보완개선폐야 한다고 말했다. 가증스럽게도 교육부장관 황우여조차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는 것”이 임기 중 꼭 하고 싶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특별법 개정으로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으로도 얼마든지 순직 인정과 유족연금 등을 받아야 마땅하다.

이미 사법부는 2012년 기간제 교사의 성과상여금 소송에서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현행 공무원연금법을 아무리 살펴봐도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연금 대상자에서 제외하라는 내용은 찾을 수 없다. 이처럼 두 교사의 순직 인정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 정부는 한사코 그러려고 하지 않는다. 두 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순간, 전국의 기간제 교사들에게 공무원연금 지급 등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기간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마포구청이 빼앗아 간 지부 현판을 되찾아오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장, ‘사수넷’ 회원

지난주 초 마포구청은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전공노 명의) 현판을 빼앗아 갔다. 구청 측은 노조 현판을 빼앗아 간 뒤 지부 사무실을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는 것처럼 꾸며 정부에 거짓 보고를 하려 했다.

이에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이 빼앗아 간 현판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

며 항의 행동에 돌입했다. 마포구지부는 노조 지도부 선거가 끝난 후 곧바로 성명서를 발표해 “부당한 노조 사무실 폐쇄 시도 압박에 굴하지 않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 뒤 구청장 항의 면담 요청, 팻말 시위 등 항의 행동을 시작했다.

또, 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연대해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에 반대하는 지역대책위를 구성했

다. 지역대책위는 곧바로 사무실 폐쇄와 노조 탄압 시도 규탄 성명 발표와 기자회견(10월 27일 12시, 마포구청 앞)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회의원 정청래(마포 을)에게도 노조 사무실 폐쇄에 반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즉각적이지는 못했지만 마포구지부가 단호한 저항을 시작하자 구청 측은 현판을 되돌려 줬다. 작지만 중요

한 승리를 거둔 것이다. 그러나 노조 현판을 되찾았다고 싸움이 끝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사무실 폐쇄 공격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중 폐쇄를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마포구지부는 구청 측과 단호히 맞설 뿐 아니라 정부의 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에 맞서 저항하고 있는 지부들과 공무원노조 중앙과 함께 투쟁할 것이다.

지역(지부)별 각개투쟁이 아니라 투쟁을 집중시켜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연금 개악 저지에 앞장 선 노조 간부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정부는 노조 탄압으로 손발을 묶어 놓고 고용과 임금을 공격하려고 한다. 실제 정부가 사무실 폐쇄 공문을 시행한 것이 9월 24일인데, 바로 다음 주인 10월 2일에 인사혁신처는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 계획을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이런 공격이 “민주노조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고]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 세력을 무력화하고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이라고 규정해 놓고도,

노조사무실 폐쇄 시도에 맞선 투쟁을 사실상 지역(지부)에 맡겼다. 그러다 보니 “사무실 폐쇄 시한인 10월 8일까지 자진 폐쇄한 전공노 사무실은 27곳 중 15곳”이나 된다.

구청 측과 노조 간부들이 협의해 ‘자진 폐쇄’로 신고하고 비공식적으로 노조 사무실을 사용하는 실용주의적 대응도 보인다. 일단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것인데, 정부나 구청 측이 이후에 공격할 명분을 주는 한편 사무실 폐쇄에 맞서 투쟁하는 지부의 간부와 현장 활동가들의 사기를 떨어뜨린다.

또 정부가 ‘전공노 사무실 27곳’만 폐쇄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해선 안 된다. 박근혜 정부는 처음에는

옛 전공노만 문제 삼더니 지금은 형식적으로 합법 노조의 틀을 유지하고 있는 민공노(전국민주공무원노조) 사무실도 폐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검경을 동원해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여부를 사찰하고 있다는 소식도 있다. 27개 노조 사무실만을 폐쇄하는 거라면 검경이 나설 리 없다.

노조 사무실 폐쇄는 실제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2006년과 2009년 사무실 폐쇄 때도 단체협약 파기 등 투쟁 성과를 되돌리려 했었다. 벌써부터 일부 기관에서는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청사 출입을 금지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악마에게 손가락을 하나 내주면

몸통 전체를 요구하는 법이다. 공무원노조 활동가들은 노조 내 실용주의적 타협을 부추기는 주장과 행동에 단호히 논쟁하고 맞서야 한다.

한편, 사무실 폐쇄에 맞선 투쟁이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주장해 왔던 김주업 신임 집행부는 이 투쟁을 지부별로 알아서 하도록 하지 말고 투쟁 전선을 집중시켜야 한다. 그래야 저항하는 지부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일부에서 벌어지는 실용주의적 타협을 중단시킬 수 있다.

또, 공무원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 후퇴에 맞선 요구를 사무실 폐쇄 시도 규탄 행동과 결합시키고, 이런 운동에 현장 조합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조직해야 한다.



함께 참가합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 1년 11·7 국민대회
일시 : 2015년 11월 7일(토) 오후 6~8시
장소 : 광화문 세월호광장
주최 : 4·16연대

민주노총은 총파업으로 11월 총궐기를 뒷받침해야 한다

김하영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국정감사 직후 최우선 과제로 ‘노동개혁’ 입법 착수를 꼽으며 노사정위 후속 논의를 촉구했다. 그래서 결국 10월 13일 노사정위가 후속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들로서는 한 걸음 전진한 것이다. 교육개혁과 금융개혁 같은 나머지 4개대항도 서두르는 양상이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교육개혁의 일환이자, 노동자 공격과 총선을 위한 보수층 결집용이기도 하다.

노사정위는 후속 논의 중 비정규직 문제(기간제법과 파견법)를 우선 다루고, 합의사항을 11월 초까지 국회로 넘기겠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정부와 새누리당이 노사정위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불평하며 비정규직 문제는 노사정위가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하자던 한국노총 지도부가 또다시 하루 아침에 말을 뒤집고 노사정위 후속 논의에 합의한 것이다

한국노총 지도부는 마치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가이드라인(일반해고, 임금피크제 등 취업규칙 변경 완화) 논의를 뒤로 미루는 ‘시간 끌기’ 전술에 성공한 것처럼 말한다. 그러나 노사정위 후속 논의에서 기간제법과 파견법 관련 논의를 우선해 달라던 것은 정부와 새누리당의 요구였다.

지연 효과?

민주노총 조직들을 포함한 노동조합 운동 내에 은근히 퍼져 있는 “노동개혁” 지연시기” 효과에 대한 기대는 두 가지 점에서 안일한 관측이다.

첫째, 노사정위에서 비정규직법 개악 논의가 시작됐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법 개악에 탄력을 줄 수 있다. 11월 초까지 후속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일단 정부·여당은 새누리당안으로 국회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에 따라 새누리당안은 11월 3일 국회 환노위에 자동 상정되고, 새정치연합이 보류하지 않는 한 곧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갈 수 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의 영향을 받긴 하겠지만, 현재 새정치연합은 정의당과 달리 법안심사소위 상정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다.(일각에서는 새정치연합이 며칠은 버텨 주지 않을까 기대하기도 한다.)

비정규직 문제도 안심할 수 없지만, 통상임금이나 노동시간 문제 등에서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위험하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 않고, 심지어 정규직 양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노동개혁’ 법안은 얼마든지 새누리당과의 정략적 거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

새정치연합의 은수미 의원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좌담에서 당내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솔직히 시인했다. “정당 간 합의를 하는 경우가 걱정이다.



이후 더 큰 투쟁을 벌이기 위해서도 파업을 통해 투쟁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쉬운 해고·평생 비정규직 노동개악 분쇄 9·23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

그러면 환노위 의원들은 당과 싸우든지 손을 들어주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지도부 눈치를 봐야 하는 총선을 앞두고 의원들이 어디로 기울지는 비교적 명백하다.

일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이번에는 역으로 그것이 노사정위 후속 논의 합의를 압박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러면, 이대로 뒤편가는 최악의 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을 명분으로 한국노총 지도부는 또다시 야합에 나설 수 있다. 한국노총 산하 3개 연맹(금속, 화학, 공공)은 노사정위 후속 논의 합의를 규탄하는 성명에서 “논의는 하되 합의는 하지 않겠다”는 한국노총 집행부의 기대와 희망사항은 점차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직법 개악마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노동개혁’이 지연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안일한 희망적 관측인 이유로서 둘째, 정부는 가이드라인 발표 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현장에 관련 내용을 관철시키라는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실제로 임금피크제는 공공부문부터 상당히 관철했고, 성과연봉제도 공공부문에서 곧 추진에 착수할 예정이다.

심지어 노사정위 후속 논의 합의의 틀 후인 10월 15일 고용노동부는 3개 학회와 함께 금융, 제약, 조선, 도소매, 자동차부품 등 5개 업종의 임금피크제 모델을 제시했다. 사실상 5개 업종에 대한 임금피크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셈이다.

총궐기와 총파업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사정위

후속 논의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노동개혁’ 공세에 박차를 가하는 추진력으로 삼고 싶어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노동개혁’ 추진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위에서 지연 효과에 대한 기대를 반박했지만, 그 반대 효과를 주장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필자가 진정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들이 사태를 관망하며 마음 한 구석에 ‘지연’이라는 요행을 바란 채 결정적 공격 시기를 점치는 데 몰두하기보다 사태에 능동적으로 뛰어들어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도 더 자신 있는 투쟁으로 나아갈 채비를 갖추 수 있다.

가령 민주노총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에 적극 나서 이 문제와 ‘노동개혁’ 문제를 결합시켜 투쟁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 점에서 지난 10월 17일 주말 집회에 민주노총 지도부가 산하 조합원들을 별로 동원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었다.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차질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호하게 노동자 투쟁을 확대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야 국회 논의에서 ‘노동개혁’에 쉽게 합의하지 못하도록 새정치연합을 압박할 수 있다. 또, 그래야 한국노총 지도부에 대한 산하 노조 조합원들의 반발을 고무해, 한국노총 지도부가 야합을 반복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수 있다. 현재 한국노총 산하 3개 연맹은 노사정 합의 파기를 촉구하는 단위노조 대표자 모임과 선언을 조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의 11월 계획은 불충분하다.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가이드가인 발표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전면 총파업을 결정했는데, 여기서 총파업은 11월 14일 총궐기 이후로 미뤄져 있다(14일 이전에 법안심사소위 상정이 안 되기를 바라면서).

현재 11월 투쟁에서 단연 강조되고 있는 것은 14일 총궐기이다. 민중총궐기 투쟁본부가 주최하는 총궐기에는 농민·빈민·학생 등 민중운동 진영이 함께할 예정이고 이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그저 여러 민중 세력의 하나로서 집회 참가에 만족할 게 아니라, 전날인 13일 노동자 고유의 힘을 동원하는 총파업에 나섬으로써 자체 힘을 키우는 동시에 민중진영 총궐기 성공의 기반을 제공하려 애써야 한다.

현재 민주노총 지도부는 거꾸로 14일 총궐기에 기대어 총파업으로 나갈 자신감을 얻겠다는 구상이다. 자발성에 기대고 총궐기 성공의 덕을 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앞서 조직하기보다 사태를 추수하려는 것은 민주노총이 한국 사회에서 여전히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이라는 점으로 보나, 현국면의 성격을 보나 적절하지 않다.

지금은 거리의 운동이 폭발적 활력을 띠고 노동현장이 사기가 저하된 상황이다. 가령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로 인한 분노는 광범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발적 행동으로 분출하고 있지는 않다.(정치적 대안이 미덥지 못해서 일 것이다.) 오히려 자발성에 훨씬 덜 의존해도 되고 기존 조직력에 기초할 수 있는 총파업이 저항을 키우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설사 수십만 거리 시위가 벌어진다 해도 그것이 자동적으로 노동자 총파

업을 고무하는 것도 아니다. 2008년 촛불 당시 수십만 규모의 시위가 여러 날 지속됐고 그 시위대가 노동자들의 파업을 기대했음에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단지 시위대의 일부로서 참가하기를 선호하면서 조직 노동계급 고유의 집단적·경제적 힘을 동원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물론 이 점은 시민·사회운동층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다.)

박근혜와 사용자들의 노동 개악을 막기 위해 지금 중요한 것은 조직노동자들이 집단적 힘을 발휘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단지 총궐기의 일부가 되려 하기보다, 13일 총파업 지침을 내림으로써 앞서서 총궐기를 뒷받침하고 14일 이후에도 대비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자들은 11월 14일 이전에는 총파업에 나설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 한 달 동안 총파업 조직에 나서지 않는다면, 똑같은 얘기가 11월 14일 이후나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에도 나오지 말란 법이 없다. 악순환이다.

실질적 총파업 태세를 갖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노동자들 스스로 파업을 위한 기층 조직에 나서면서 투쟁 근육을 키워 나가는 것이다. 다소 시간을 허비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조직해서 민주노총이 총궐기에 맞춰 11월 13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면, 노동자들은 자신감과 사기를 높이면서 정부 공격에 맞설 수 있는 투쟁 근육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11월 14일 이후 노동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다시금 저항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서도 좋은 방법이다. 노동자들은 투쟁을 통해 스스로의 힘을 확인할 때 더 큰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현 상황에 대한 이해와 좌파들의 과제

민주노총 지도부가 11월 중순까지의 투쟁을 단순히 총궐기로 대체하고 총파업 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좌파들이 공조해 지도부에게 총파업 결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했다면 상당한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것은 ‘결정적’ 시점을 11월 중순 전으로 보느냐 후로 보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다. 11월 중순 전 ‘총파업 불가’ 입장은 10월과 11월 초의 중요한 시기에 총파업 조직을 방치하게 만들으로써 이후 노동 개악 저지 투쟁 전체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렇게 되면 “가이드라인 강행 시”,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시” 총파업도 제대로 조직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파업을 준비해야 할 때 하지 않고 뒤로 미뤘다가, 준비 없이 파업에 들어가거나 호지부 지침으로써 총파업 회의론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을 우리 나라 노동운동에서도 여러 차례 보았다.

아쉽게도, 10월 초부터 ‘노동개혁

▶ 4면으로 이어짐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삼포 세대’의 처지 개선에 쓸모없거나 더 나쁘거나

이현주

정부가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이하 제3차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006년에 1차, 2010년에 2차에 이은 세 번째다. 2000년대 들어 한국은 초저출산(여성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 국가로 분류됐다. 한국 정부는 이를 심각한 문제로 여겨 왔다. 저출산이 장기적으로 노동력 부족을 낳아 한국 자본주의 발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번 제3차 기본계획에서도 정부는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 감소와 고령화, 이에 따른 노동생산성 저하와 잠재성장률 하락을 우려했다.

지난 10년 동안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보육·교육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시장화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 고용률도 높이려는 것에(이른바 ‘일-가정 양립’) 초점을 뒀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기혼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중심”이 아니라 “만혼·비혼 추세 심화”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보육 지원에 1백조 원에 가까운 돈을 썼는데도(상당수는 그 부담을 지방정부나 지방교육청에 떠넘기는 방식이었다) 출산율이 오르지 않자, 결혼을 더 일찍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공개되자마자 비웃음과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청년들의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원인으로 “고용, 주거” 등의 문제를 꼽았다. 그러나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은 ‘미혼남녀 단체 미팅’ 같은 황당한 정책도 있는가 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킬 내용들도 있다.

가령, 제3차 기본계획은 실업, 비정규직 등으로 청년들의 고용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제시했다. ‘안정적



노동시장 구조 개혁, 비정규직 확대, 복지 공백 등이 담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인 일자리만 보장해 주면 애 낳지 말래도 낳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오히려 노동 불안정성을 더 심화시킬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다.

2017년까지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 4만 개를 신설하겠다고 하지만, 그 방식은 교원명예퇴직 확대와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서다. 그 방안들은 이미 지난 7월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에 포함돼 있던 내용들로, 그 때도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끌어모은 것에 지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고용 확대 방안도 못 되는 것들이다. 가령 현재 일부 병원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포괄간호서비스는 간호인력을 필요 수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짊끔 늘려 간호사들의 노동 강도를 대폭 늘리는 효과를 내고 있다. 한편, 교사 명예퇴직을 늘려 청년 고용을 그만큼 늘리겠다는 계획은, 교원 총원은 늘리지 않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 하는

유망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명분으로 “의료법인부대사업 확대 및 자법인 설립사례 창출 지원” 같은 의료 민영화 정책도 슬쩍 끼워 넣었다.

주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전세대출 금액 인상 등도 황당할 따름이다. 전세 자체가 없는 현실을 전혀 모르는 탁상공론일 뿐 아니라, 오히려 전세값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어서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부동산 대책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시장화 방향

출산·육아 지원 문제도 그렇다. 정부는 임신·출산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겠다고 했지만, 진정한 의미의 ‘국가의 보육 책임 강화’는 빠져 있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렸지만 민간 보육시장을 키우는 시장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는 불만이 팽배하다. 그런데 정부는 기존 방식으로 출산율이 늘지 않자 이제 전업주부들의 보육시설 이용을 줄이려 한다(이

른바 ‘맞춤형 보육’).

동시에 여전히 시장화 방향을 유지하려 한다. 정부는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방점은 공공형 어린이집 확충에 맞춰져 있다. 공공형 어린이집은 이름만 ‘공공형’이지 서비스를 민간이 제공하는 방식이어서 이윤 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방식은 민간 어린이집의 부정·비리를 낳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또 정부는 여전히 ‘일-가정 양립’을 내세우며 시간제 일자리·유연근무제 확대 같은 노동유연화 정책도 지속하려 한다. 반대로 직장에서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여성이 겪는 차별을 개선하는 조처들은 대체로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의심되는 것뿐이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면서도 정부가 이런 대책들밖에 낼 수 없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을 책임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저출산 극복’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평범한 사람들의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줘야 하지만, 경제 위기 속에서 정부는 재정 지출을 어떻게든 줄이려 한다. 이 때문에 정부가 지원을 늘릴 때조차 규모나 방식에서 명백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65세에서 70세로)처럼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책이라고 내놓은 다른 것들을 봐도, 정부가 재정 지출을 줄이는 데 얼마나 혈안인지를 알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재원은 대기업과 부유층에 과세해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면,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대폭 확충해 청년 실업을 해소하고, 질 좋고 값싼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할 수 있다. 또,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 주거난을 해결할 수 있다. 문제는 기업주들의 이윤을 보장하려고 과세하지 않는 정부다. 노동운동은 노동자뿐 아니라 다수 청년과 여성,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요구를 실현시키는 일에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 3면에서 이어짐

저지와 총파업 승리를 위한 공동행동’(이하 총파업 승리 공동행동) 준비모임을 시작했던 노동전선, 노동자연대, 노건투, 좌파노동자회 등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응할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총파업 승리 공동행동’ 제안서에는 “현장 활동가들이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 지도부에 파업 계획을 촉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파업이 가능하도록 조직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이 포함됐다. 또, 활동가 간담회(10월 9일)에서도 ‘민주노총 지도부에게 11월 13일 총파업을 하고 14일 총궐기로 이어가자는 제안을 하자’는 데에 공감대가 컸다.

그러나 막상 이를 “선언” 등으로 집행하려 하자 노동자연대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대부분 이에 반대하고 나섰다. 일부는 민주노총 좌파 지도자들조

차 이를 수용하지 않으려 한다는 것에 압력과 위축감을 느낀 듯했고, 일부는 어차피 동력이 안 돼 뺑파업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제안을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사실상 11월 14일까지는 총궐기로 족하다는 셈이었다. 이에 동의하지 않은 노동자연대가 불참한 이후, 실제로 ‘총파업 승리 공동행동’은 11월 14일 총궐기와 15일까지 1박2일 투쟁을 제안하는 것으로 “선언” 내용을 축소시켰다.

좀 더 근본적으로, 이전의 근저에는 현 상황에서 좌파들이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파업 지침을 내리라는 촉구를 (사실상 압박을) 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가 하는 쟁점이 깔려 있다.

현재 현장조합원들은 싸울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다수 조합원들이 지난 직선제 선거에서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며 ‘2016~17년 준비된 총파업’을 내세운 후보가 아니라, 변변한 상층 지도자 경력은 없지만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후보(한상균 위원장)를 선택한 게 이를 보여주는 한 중요한 표현이었다. 비록 대부분의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다시금, ‘현장은 준비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꺼내들었지만 말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투쟁 명령을 내리지 않을 때 현장 조합원들이 스스로 투쟁에 나설 만큼 싸울 자신이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장조합원들은 현재 공식 지침 없이 행동에 나설 만큼 자신감이 높은 상태는 아니다.

바로 이런 모순 때문에 좋건 싫건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투쟁 결정이 중요하다. 좌파들은 노동조합 지도자에게 파업 선언을 촉구하고 이를 활용해 현장에서 현장조합원의 활동과 의식을 발전시키려 애써야 한다.

따라서 지금 이 문제(즉, 노조 지도부의 투쟁 결정)를 건너뛰고 다른 곳에

서 총파업 좌절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서 안 된다. 오히려 총파업이 실질적이 되지 못한 건 민주노총 산하 연맹과 주요 노조의 지도자들 상당수가 파업 지침을 내리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침만으로 파업이 성사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하면 차칫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지도부의 역할을 도외시한, ‘아래로부터의’ 이니셔티브 운운은 초좌파적 회피론이기 십상이다.

“그동안 활동가들은 상층 지도부가 투쟁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해왔다. 이제 비판을 넘어 스스로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노동전선 9.23 총파업 특보)

“정작 중요한 것은 총파업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을 현실화할 수 있는 힘이다.”(노건투 9.23 총파업 특보) “4·24, 7·15, 9·23 파업의 경험

은 지도부가 선포한다고 총파업이 저절로 이뤄지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현장에서 총파업의 열기를 얼마나 달구어 내는가가 관건이다.”(노건투 10.15 공공운수노조 총파업 특보)

투사들과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 그러나 현장조합원들의 자신감 수준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은 채, 지침과 관계없는 총파업의 분출이나 현장 조합원운동을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언뜻 매우 급진적으로 보이는 접근법이 구체적 맥락에서는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박 가하기와 비판하기를 포기함으로써, 오히려 관료들이 부담을 덜고 곤경을 피하게 해주는 꼴이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에게 순응하거나 그저 묵살해 버리는 것, 둘 다를 피해야 한다.

제러미 코빈의 승리와 시험대

제러미 코빈이 블레어 지지자들을 완벽히 제압하고 노동당 대표로 당선하자 기성 정치권이 요동쳤다. 영국 전교조(NUS) 조합원이자 사회주의노동자당(SWP) 활동가인 **손 도어티**는 우리가 코빈을 방어하기 위해, 더 중요하게는 코빈 승리의 바탕에 있는 원칙들을 방어하기 위해 조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말이다.

정치도 인생과 같아서 언제나 뜻밖의 일이 일어난다. 제러미 코빈이 노동당 당대표 선거에서 완승을 거둔 것은 몇 달 전에만 해도 꿈만 같이 여겨지던 놀라운 일이다. 내가 교사로 거의 40년 동안 살면서 보아 온, 지역구를 자전거로 누비며 세상의 모든 파업과 모든 진보적 운동을 지원하던 그의 원이 노동당 대표가 될 줄이야, 도무지 상상도 안 되는 일이다.

하지만 나를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코빈이 당선하면 야단법석이 일어나리라고 예상했다.

코빈의 친우이자 예비내각*의 재무장관 존 맥도넬은 집무를 시작하자마자 반발의 “쓰나미”가 일어났다고 했다. 어떤 면에서는, 반발의 규모가 그렇게 크고 그토록 험악한 독설이 쏟아진 것을 기꺼워해야 할 일이다. 코빈과 맥도넬이 대변하며 지키려 애쓰는 공약들을 노동당 안팎의 우파들이 끔찍이 싫어해서 공격이 그토록 거센 것이기 때문이다.

9월에 열린 영국노총(TUC) 대의원 대회에서 연설하며 코빈이 국립미술관 노동자 파업에 성원을 보낸 것은 정말이지 상쾌했다. 노동당 대표가 파업 지지 연설을 한 게 도대체 얼마만인가? 실제로 노동당 당대표 선거 기간 중 친보수당계 일간지 <데일리 텔레그래프>조차 보수당 일각의 단일함을 꾸짖었다. 보수당은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되면 2020년 총선에서 자기네가 낙승할 것이라고 봤다. <데일리 텔레그래프>는 보수당의 기대가 어긋날 수 있다고 제대로 지적했다. 코빈의 당선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 전제들에 근본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규모

코빈의 승리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떠올리는 것이 좋겠다. 코빈은 25만 1천4백17표(59.5퍼센트)를 득표했고, 앤디 버넝은 8만 4백62표(19퍼센트), 이베트 쿠퍼는 7만 1천9백28표(17퍼센트), 리즈 켄들은 1만 8천8백57표(4.5퍼센트)를 득표했다. 코빈은 당원의 49.6퍼센트, 공식 명부에 이름을 기재한 지지자(3파운드를 내고 등록함)의 83.8퍼센트, 가맹 노동조합 조합원의 57.6퍼센트의 표를 얻어 세 부문 모두에서 승리를 거뒀다.

당선 직후 코빈이 우파들의 공격에 직면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예상대로 언론의 늑대들은 코빈을 박살내려고 했다. “코빈이 셔츠 단추를 끝까지 안 채웠다”는 쓰잘데없는 지적부터 코

빈이 총리가 되면 군부가 반란을 일으킬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협박까지 다양한 공격이 있었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협적이었던 것은 자유주의 언론들과 예비내각 성원을 비롯한 노동당 의원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자유주의 언론의 양대 기둥인 <업저버>와 <가디언>은 선거운동 기간에 맹렬하게 코빈 반대 운동을 벌였고, 코빈이 승리한 뒤에는 곧바로 코빈이 실패하고 말 것이라는 예측을 내놨다. 두 신문의 코빈 적대에 많은 독자들뿐 아니라 두 신문의 가장 명망 높은 필진들도 불쾌해했다. 결국 <업저버>는 원로기자 에드워드 벌리어미와 윌리엄 키건이 <업저버>와 자매지 <가디언>의 입장을 비판한 글을 지면에 실을 수밖에 없었다.

벌리어미는 이렇게 썼다. “내 개인 의견으로, 우리[<업저버>]는 평등·평화·정의라는 도덕적 원칙에 따라 적어도 선거 결과의 정신을 받아들여야 했는데, 그러지 않아서 많은 독자들을 실망시켰다.” 키건은 긴축에는 코빈 같은 대항마가 필요하며, 코빈이 내놓은 정책은 매우 합리적이고 치우침이 없다고 주장했다.

벌리어미와 키건은 <가디언>의 핵심인사 조너선 프리드런드가 대표한 입장을 비판한 것이다. 프리드런드는 이렇게 말했다. “코빈은 자기 얘기만 하지 말고 노동당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해서, 코빈이 자신의 긴축 반대 원칙과, 영국에서 긴축을 시작한 블레어의 동료들이 내세우는 신자유주의 컨센서스를 조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빈이 애국가를 부르고, 정장을 제대로 차려 입고, 보수적 토크쇼인 ‘앤드루 마 쇼’에 출연하는 등 기성 정치권의 구시대적 문화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코빈이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이라는 주장에 이런 반문을 할 수 있다. 코빈이 왜 출마했고 그렇게 큰 지지를 얻은 이유는 무엇인가?

노동당 내 코빈 반대파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팔코너 경과 힐러리 벤은 코빈이 영국의 시리아 폭격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할 때를 대비해 자신들은 미리 영국의 시리아 폭격을 지지할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당의 런던 시장 후보 사디크 칸은 <데일리 메일>의 일요판이자 친보수당계 주간지인 <메일 온 선데이>에 코빈과 맥도넬을 비난하는 글을 기고해, 중동과 아일랜드에 대한 코빈과 맥도넬의 견해가 테러와 유대인 혐오 공격을 부추길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가 무무나는 코빈이 당 대표가 됐으니 다음 총선에서도 보수당이 승리하면 거리 소요가 일어날 수 있다며 공포를 부추겼다. 찰스 클라크와 로이 해터슬리는 코빈이 “파



사진 출처: lewishamteamer (틀리다)

노동당 안팎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제러미 코빈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지지로 당선했다.

분하고” “불평분자들의 소망을 대변하는 우스꽝스러운 인물”이고, “교묘하게 만들어진 이미지”에 의존한다는 인신공격을 했다.

아마도 이런 노동당 내 코빈 성토는 프리드런드가 코빈에게 들려 주고 싶은 말일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점이 빠져 있다. 코빈이 다른 사람들과 달라서 당선했다는 점이다. 코빈은 신노동당 지지자가 아니다. (사실, 당대표 후보 중 가장 충실한 블레어 계파인 리즈 켄들은 겨우 4.5퍼센트를 득표했다.) 코빈은 긴축,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난민 마녀사냥에 반대하고, 철도 재국유화와 부의 재분배를 지지했기 때문에 당선했다. 코빈이 이제 와서 그의 원칙을 내던지는 것은 그에게 투표한 사람들을 모두 모욕하는 일일 것이다.

사기충천한

나는 코빈이 거의 욕설 같은 이런 비난 세례에 굳건히 맞서기를 바란다. 타협할수록 적들이 약점을 잡았다고 보며 더 거세게 공격할 것이다. 코빈의 강점은, 그의 정치적 지지자가 스무 명도 안 되는 노동당 의원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가 당대표가 되기를 바

라며 지지하고 그의 유세를 보며 사기충천한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온다.

당대표 선거운동 기간에 코빈이 개최한 1백 번의 대중 집회를 보며, 주류 정치권에게 소외된 청년들이 열광했고, 노동당의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에 실망한 많은 장년 사회주의자들이 활력을 되찾았다. 코빈의 승리는 진짜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의 승리였다. 코빈의 승리는 긴축 정치에 대한 반감이 전국 곳곳에서 만연해 있음을 보여 줬다. 코빈 당대표 당선 이후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겨우 열흘 만에] 약 6만 2천 명이 노동당에 가입했다. 그 중 4분의 1은 과거에 탈당했다가 재입당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심중팔구 신노동당이 추진한 전쟁과 민영화에 실망해 탈당했던 사람들일 것이다.

당대표 선거 결과가 발표된 9월 12일, 희망과 인류애가 나타난 또 다른 일이 일어났다. 런던을 비롯해 영국 전역의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난민 환영 시위를 벌인 것이다. 이는 전쟁을 피해 유럽으로 온 수많은 난민들의 끔찍한 처지에 충격을 받은 유럽의 보통 사람들의 울분이 울려 솟아 오른 일이었다.

코빈이 노동당 대표로 처음 한 일이 이 시위에 참가해 연설한 것이었다. 그가 앞으로 긴축 반대, 전쟁 반대, 인종차별 반대 정서를 어떻게 결집시킬 것인지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징후다.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코빈에 대한 끈질긴 공격과 코빈을 흠집 내려는 [우파의] 시도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코빈이 어쩔 수 없이 타협할 때마다 “배신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할까? ‘개혁주의 정치는 체제에 굴복하기 마련’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어야 할까? 아니면, 최대한 광범한 운동을 건설해서 코빈이 계속 당대표직을 유지하며 공약한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파로부터 그를 방어하며 지지해야 할까?

전자처럼 한다면 소종파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우리 정견을 들을 청중을 얻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파들의 공격으로부터 코빈을 방어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코빈을 방어하면서 긴축 반대, 난민에 대한 연대, 인종차별 반대, 전쟁 반대 등 우리 자신의 정치에서도 핵심적인 원칙들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 6면으로 이어짐

예비내각 (Shadow Cabinet)

내각책임제하에서 야당이 차기 집권을 대비해 미리 꾸리는 내각.

▶ 5면에서 이어짐

코빈을 끌어내리려는 공격이 성 공하면 누가 득을 볼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코빈이 그렇게 추락하면 정치적 분위기가 혁명적 관점 쪽으로 선회하기보다는 사기 저하와 패배감이 만연한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

방어

‘단결해 싸우자’(Unite the Resistance)*가 “제러미 코빈의 긴축 반대 정책과 그가 노동당을 이끌 민주적 권리를 옹호하라”는 연서명을 발의한 것은 올바른 대응의 중요한 사례다. 이미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모두 이 연서명에 서명했다. 몇몇 유력 노조 사무총장들(영국은 위원장보다 사무총장이 노조의 진정한 실세다)이 존 맥도넬을 예비내각의 재무장관으로 임명한 코빈의 결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 연서명은 특히 중요하다.

이 연서명은 코빈의 선거운동이 보낸 메시지에 많은 사람들이 고무됐고, 코빈은 당대표 경선에서 내놓은 정책을 추진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코빈을 약화시키려 애쓰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연서명을 모든 일터와 지역사회에 돌려 서명을 받아야 한다.

코빈 자신은 빈곤, 인종차별, 전쟁에 맞선 사회운동을 창출하고 싶다고 주장해 왔다. 진정한 대중운동이 건설된다면 이는 코빈이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우파의 반격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운동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운동은 긴축 반대 운동을 모두 지지하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난민 연대 운동을 지지하고, 파업 등 노동자 저항을 지지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 삭감에 반대하는 운동을 모두 지지하고, 철도 재국유화를 지지하고, 의료 공공성을 지키고, 시리아 공습이나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재도입 등 전쟁과 핵 확산을 반대하는 운동이어야 한다.

이것들이 코빈 방어 운동과 보수당의 긴축재정에 맞선 운동 둘 모두의 토대가 되는 원칙이다.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분명하다. 코빈이 노동당 의원단에 의존한다면 그는 불행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는 점이다. 우파들은 벌써부터 그의 실각을 노린 계락을 꾸미고 있다.

코빈이 일으킨 운동의 힘이 노동당 당내 투쟁에만 소비된다면 그 운동은 동력을 잃을 것이다. 당장 치러야 할 긴급한 전투가 있다. 보수당은 2020년 총선 때까지 긴축을 미뤄두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도 그때까지 투쟁을 미뤄 뒤서는 안 된다.

코빈을 방어하면 그를 비판하지 말아야 할까? 그래서 안 된다. 앞으로 코빈이 실망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다원주의가 좋은 원리인 듯하고, ‘광교회파’*라는 말이 개방적으로 들리지만, 추카 우무나처럼 매사에 자기 지위를 이용해 코빈을 끌어내리려 할 인물들을 예비내각에 들이는 것이 정말 좋은 생각일까?

류크 에이크허스트는 코빈이 국방·외교정책 부문에서 예비내각 성원 일부와 이미 타협했을 수도 있다고 <레이버 리스트> 웹사이트에 간략히 진술하면서, 코빈이 실각할 수 있는 여러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노동당 의원 20퍼센트만 동의하면 코빈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다. 많은 의원들이 와신상담하면서 코빈을 공격할 최적의 시기를 노리고 있다. 코빈은 노동당 당대회에서도 여러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국 국가의 성격이나 ‘사회주의로 가는 의회의 길’ 같은 더 일반적인 주제에 대해 주장하기를 꺼려서도 안 된다.

코빈은 틀림없이 작고한 마르크스주의 정치평론가 랄프 밀리밴드의 주장에 친숙하고, 의회주의적 전략이 그에게 가할 제약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랄프 밀리밴드는 그의 영향력 있는 저서 <의회 사회주의>의 후기에서 좌파 의원들의 활동은 의회라는 기구 자체와 노동당 기득권층의 보수주의의 방해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밀리밴드는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주장했다. “즉, 노동당은 사회주의적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정당으로 변화될 수 없다.”

운동

이런 주장은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런 주장을 참을성 있고 동지적인 태도로 해야 한다. 그러나 혁명적 전통에 서 있는 사회주의자들이라면, 지금 노동당 대표로서 청년층이든 장년층이든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치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을 주고 있는 사람은 좌파적 개혁주의 정치인이라는 사실을 알 만하고 또 이 점에서 정직해야 한다.

이 운동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권리를 얻고 싶다면 이 운동의 일부가 돼야 한다.

‘단결해 싸우자’의 연서명을 확대하는 것은 우리가 적들에 맞서 싸울 한 가지 방법이다. 어디를 가든지 서명을 받고 연서명의 주장을 옹호해야 한다.

우리는 코빈 방어 운동을 대중운동을 건설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으로 벌일 수 있고,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것이야말로 보수당에 제대로 맞서는 데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10월호
번역 김준호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입당하지 않고, 제러미 코빈의 지지자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며 여러 운동을 건설해야 한다.

사진 출처: Rof (블라카)

영국의 혁명가들은 노동당에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코빈을 방어하려면 노동당에 입당해야 하지 않을까 고민할 것이다. **샬리 캠벨**은 노동당 입당이 혁명가들에게 올바른 전술인지 의문을 제기한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편집팀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덧붙인 말이다. 그리고 몇몇 특수 사례는 좀 더 일반적인 용례로 바꾸기도 했다.

손 도어티는 노동당의 코빈 지도부를 지지·방어하는 것이 사회주의자들에게 —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에게도 —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했다(5~6면의 글 참고). 그런데 코빈이 노동당 대표직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를 염원한다면, 아예 노동당에 입당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전투가 벌어질 곳도 노동당일 테고, 당내 우파에 맞서 코빈 지지자가 많이 필요한 곳도 노동당 안이니 말이다.

이것은 원칙의 문제는 아니다. 예나 지금이나, 여러 혁명적 사회주의 단체들은 노동당을 비롯한 개혁주의 정당 안에서 조직해 왔다. 코빈이나 존 맥도넬 같은 참된 사회주의자들이 이끄는 노동당이라면 [그 안에서 조직하기가] 편찮을 수 있다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할 법하다. 그들은 옹게도, 그리스 시리자, 스페인 포데모스, 스코틀랜드 국민당, 버니 샌더스 등 유럽 등지에서 긴축 반대와 인종차별 반대 주장을 중심으로 정치세력들이 결집하는 새롭고도 놀라운 현상이 영국에서는 코빈 당선으로 표현됐다고 본다.

도어티는 코빈 지지자가 거의 없는 노동당 의원단 내에서 코빈이 직면한 압력과 공격을 설명했다. 분명 기층 지역위원회들에서도 논쟁이 있을 것이

다. 코빈을 지지하며 가입한 신입 당원들을 결속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토론하기 위한 비공식적 당 활동가 모임들이 이미 열리고 있다. 노동당은 블레어 집권기에 활동가 기반에 출혈이 있었는데, 코빈을 지지하며 입당한 새로운 피는 분명 노동당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많은 신입 당원들은 — 재입당한 옛 당원들이나 생기를 되찾은 기존 당원들도 — 긴축 반대 운동에 참가할 것이고, 어쩌면 민중의회를 통해 참가할 수 있다. 그들은 난민 환영 집회에 참가해 시위를 벌이다 코빈의 승리 소식을 들었을 수도 있고,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뒤 즉각 벌어진 여러 시위 중 하나를 조직했을 수도 있다.

요컨대, 그들은 혁명가들이 관계 맺고 협력해야 할 소중한 활동가들이다.

그러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노동당에 입당하는 것은 옳다고 보지 않는다. 여기에는 과거와 최근의 경험에 근거한 중요한 이유가 있다. 첫째, 노동당은 집권해 개혁 입법으로 사회를 개혁할 목적으로 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에 맞춰진 정당이다. 선거주의의 압력은 의원단의 우파들과만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노동당의 성공은 선거 득표를 기준으로 측정되므로 어떤 정책이든 지지율을 끌어올리지 못하면 신속하게 폐기된다.

의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의 또 다른 문제점은 영국 국가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여왕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한다거나, 영국 국가 관료 양성소인 옥스포드대학교에서 열리는 우스꽝스런 행사[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이 옥스포드 재학 시절 사교 클럽 입회식 때 신체의 ‘은밀한 부분’을 죽은 돼지머리

입 속에 집어넣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얼마 전 출간된 캐머런 평전에 포함돼 파문이 일었다]에 참석하는 ‘전통’을 따라야 한다는 압력도 받는다. 바로 이런 기준에서 언론은 이미 코빈이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벡타이를 매지 않는다고 비난한다.

이것은 단지 허례허식을 따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영국 육군의 고위 장성 한 명은 코빈이 총리가 돼 “영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려 하면, 즉 트라이던트 핵잠수함 폐기 공약을 이행하려 하면 쿠데타를 일으키겠다고 협박했다. 이는 그냥 말로만 하는 협박이 아니다. 노동당 해럴드 윌슨이 총리였던 1968년에 실제 [쿠데타] 음모가 있었다.

노동당 의원단과 평당원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들이 있지만, 의원단이 노동당에서 지도적 구실을 하며 평당원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평당원과 비당원 지지자 다수의 지지를 받지만 대다수 의원단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당을 이끌어야 하는 코빈의 처지는 녹록하지 않다. 코빈은 의원단 지도층을 넘어 평당원들에게 호소하는 동시에, 예비내각을 결속시켜야 한다. 의회 밖에서 벌어지는 운동만이 코빈에게 [당내 우파의] 압력을 버려 내고 원칙을 고수할 힘을 줄 것이다.

코빈이 당 내의 또 다른 주요 세력인 노조 관료에게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불확실하다. 예컨대 영국일반노조(GMB) 사무총장 폴 케니는 “지켜보자”는 입장이 다. (지도자가 잘 하는 것이다!)

국가에 타협해야 하는 처지인 의원단,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를 중재하는 노조 관료가 지배하는 노동당은 그 안

‘단결해 싸우자’ (Unite the Resistance)

긴축 정책을 추진하는 영국 정부에 맞서, 긴축 반대 활동가들과 청년·학생, 노조 활동가들이 함께 노동조합 파업을 지원하고자 결성한 연대체.

광교회파 (Broad Church)

영국 국교회의 일파로 예배 의식서(儀式書)와 전례(典禮) 지시문을 폭넓고 관용적으로 해석하기를 요구하고, 교리 용어를 확고하게 정의하는 것을 반대한다. 비유적인 의미로는 상이하고 다양한 정견들이 공존하는 광범한 정당을 가리킨다.



(가파 트라루크) (소셜리스트 워커)

10월 4일 보수당 당대회에 맞춰 맨체스터에서 열린 긴축 반대 시위.

입당해야 할까?

에 출중한 사회주의자가 얼마나 많은 지 간에 근본적 사회 변혁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코빈이 다른 기성 정치인들에 견줘 비할 데 없이 급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코빈의 정책은 전통적인 사회 민주주의 정책에 가깝다. 긴축 폐기, 철도 재국유화, 서민이 살 수 있는 주택 건설 등은, 많은 전통적인 경제학자를 비롯한 대다수 사람들이 동의할 만한 정책이다. 코빈은 자본주의의 작동을 근본적으로 거스르지 않는 채로 의회를 통해 이런 정책들을 이루고자 한다.

그러나 그것이 가능할까? 불행히도, 최근의 그리스 사례를 보면 그렇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알렉시스 치프라스의 시리자 정부가 올해 1월 25일 총선에서 당선한 것은 긴축 반대 운동의 승리였다. 시리자 정부는 유로 존한테 진 부채를 갚으려면 가혹한 긴축 조치를 받아들이라고 하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유럽중앙은행·IMF(“트로이카”) 등 유럽 기관들과 국제 자본들의 어마어마한 압력에 시달렸다.

결국 치프라스는 압력에 떠밀려, 강요된 긴축 조치를 수용할지 말지를 국민투표에 부쳤다. 다시 한 번 그리스의 거리 운동이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오하’(그리스어로 ‘반대’) 투표를 할 자신감을 줬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겨우 1주일 만에 훨씬 더 가혹한 긴축안에 서명했다.

운동

이 합의로 시리자 내부에서 위기가 생기고 소속 국회의원 수십 명이 왼쪽으로 이탈해 나가자, 치프라스는 9월 말에 조기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시리자는 다시 승리했지만, 이제는 트로이카의 요구를 추진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제 거리의 운동은 애초에는 자신을 대표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근본적 문제는 치프라스가 유약하거나 우파적인 것, 또는 긴축에 도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었다. 시리자가 긴축을 추진하는 유럽 자본주의 기구들에 도전하지 않는 채로 긴축에 맞서려 했던 것이 문제였다.

그리스의 혁명가들은 지난 몇 년 간 시리자에 입당하라는 요구에 저항하며, 의회주의는 가장 좌파적인 개혁주의조차 일그러지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시리자에 입당하지 않고 급진 좌파들의 선거 연합 안타르시아의 일부로서 긴축 반대 운동과 인종차별 반대 운동에 뿌리를 내렸다. 이 두 운동 모두 영국보다 그리스에서 훨씬 더 성장했으며 더 큰 도전에 직면한 상태다.

그리스 혁명가들은 [시리자로부터]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긴축과 극우파 성장에 맞서 투쟁하는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했다. 그 덕분에 그들은, 시리자의 승리에 마냥 기뻐하며 시리자가 변화를 대신 이뤄주기를 기대하다가 시리자의 굴복에 사기 저하되는 일을 겪지 않았다. 특히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SEK는 노동자 운동을 키우고 다른 길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계속 투쟁했다.

이것은 중요하다. 혁명가들은 논쟁이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혁명가들은 의회적 권모술수를 잘 묘사하려고 글을 쓰고 토론회를 여는 것이 아니다. 그저 관청은 지도자를 응원하려고, 또는 팔짱 끼고 기다리고 있다가 ‘거 봐’ 하면서 “필연적 배신”을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다. 혁명가들은 행동하고자 한다.

코빈이 당선한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코빈에게서 뭔가 다른 모습을 봤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와 불평등이 아닌 대안이 있다는 생각 말이다. 혁명가들은,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그런 대안이 실현되기를 다음 총선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다.

영국의 현 상황은 그리스가 처한 위

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비슷한 힘이 작용하고 있다. 노동자·서민에게 경제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것, 이주자·난민·무슬림들을 속죄양 삼으려는 것 말이다. 사회주의자들은 체제의 질병이 표현되는 이 증상들에 맞서, 노동당 안팎의 사회주의자, 노동조합 운동가, 청년 활동가 등이 포함된 공동전선을 최대한 폭넓고 깊게 건설해야 한다.

연대

우리는 언제나 연대, 단결, 숫적 우세 등 대중이 가진 최대 강점에서 출발해 건설하려 한다. 코빈의 승리는 우리가 그 일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난민에 대한 연대가 확산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하며 사회주의자들은 일터·대학·지역사회에서 난민에 연대하고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코빈과 그가 대표하는 정책을 방어하자는 ‘단결해 싸우자’의 연서명을 위해 서명을 조직하고, 그것을 활용해 보수당 당대회를 겨냥한 민중의회의 항의 시위와 보수당의 노동법 개악에 반대하는 장기적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코빈의 승리 덕에 사회주의자들이 신문 기사와 정치 토론의 장에 다시 오르게 됐다. 이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을 넘어 인간 관계의 기초를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전망이 있기 때문이다. 코스타스 피타스가 《소셜리스트 리뷰》 지난 호[본지 156호, ‘그리스—국민투표 이후 계속된 뜨거운 여름’에서 시리자 좌파 일부가 주장하는 위로부터의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와 진정한 노동자 권력(노동자 권력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에서 추상



(가파 트라루크) (소셜리스트 워커)

“지금도 기회다” 코빈 당선 직후 발행된 영국 《소셜리스트 워커》 1면.

적 문제가 아니다)의 결과로 쟁취할 그렉시트의 차이를 설명하면서 그 전망을 잘 표현했다. 의회에서 통과된 개혁과 노동자 운동의 집단적 힘과 상상력으로 쟁취한 개혁 사이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음을 러시아, 칠레, 이집트 등 [각각 1917, 1973, 2011년] 여러 역사적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코빈이 당선한 직후 발행된 《소셜리스트 워커》의 표제는 “지금도 기회다 (Seize the Time)”였다. 이것이 중요하다. 코빈의 승리는 그저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 아니다. 영국 정치가 전환기의 문턱에 들어섰음을 보여 주기도 한다. 5월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뒤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 저하됐었는지 생각해 보라. 앞에서 코빈이 받을 압력과 겪을 문제들을 서술했지만, 코빈의 승리는 변화가 가능함을 보여 주는 조짐이다. 코빈의 승리는 변화를 위해 싸울 만하다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월간지 《소셜리스트 리뷰》
2015년 10월호 / 번역 김준호



(가파 트라루크) (소셜리스트 워커)

시리자 집권 후의 그리스 상황은 혁명가들에게 유용한 교훈을 준다 EU집행위원장과 손잡은 치프라스.



지난 15년간 줄기차게 이어져온 비정규직 투쟁 — 지난해 10월 25일 비정규직 쉼페 전국노동자대회

사진: 이영민

비정규직 확대하는 ‘노동개혁’ 중단하라

조명지

박근혜 정부는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정규직 탓이라며 노동시장 구조 개혁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정부 공격의 칼날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가리지 않는다는 점이 날로 분명해지고 있다.

10월 13일 노사정위는 비정규직 문제(기간제법과 파견법)를 “국회 일정을 감안하여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어떻게든 11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한국노총 집행부는 9·13 노사정 아합에 이어 다시 정부·여당에 장단을 쳐준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노총 집행부가 또 다시 부작전한 태함으로 나아갈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설사 노사정위에서 추가 아합이 되지 않더라도 개악안은 11월 초 국회에서 다뤄질 수 있다. 대우리당은 이미 당론으로 관련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지금 정부·여당은 기업주들이 비정규직을 더 쉽게,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우선, 기간제 사용 기간을 연장해 기업주들이 2년이나 더 정규직 전환을 연기할 수 있게 해주려 한다. 그나마 기간제 노동자 5명 중 1명은 (정규직이 아니라 대체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는데, 이조차도 거주장소법이다.

또, 파견 허용 대상을 대폭 늘리려 한다. 정부는 애초에 55세 이상자와 전문직·고소득 노동자에 대해 파견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노동자 40퍼센트가 파견노동에 노출된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노사정 아합 직후, 그 대상을 제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법 개악안을 발의했다. 그 내용인즉, ‘뿌리 산업’에 파견을 허용하는 것인데, 이는 자동차·조선 등의 제조 공장에서 기본이 되는 업무로, 그간 사회적 논란이 돼 온 제조업 불법파견의 합법화에 파열구

를 내는 것이다.

파견 확대는 제조업 대기업들이 오랫동안 강력히 요구해 온 정책이다. 재계는 독일 등 서유럽의 파견제도가 기업 경쟁력의 필수조건이었다며, 거둬들인 불합법 파견 합법화를 촉구했다. 2013년에 현대차 사측은 “사업주의 자유를 박탈”하고 “사내하도급을 불법과 합법으로 구별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파견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바도 있다.

이 같은 법 개악 시도는 대법원의 불법파견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싸우는 사내하청 투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한편, 비정규직 법 개악 외에도 정부의 “노동개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공격한다. 사실 단협도 없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들은 그 공격으로부터 가장 큰 고통을 입을 것이다.

예컨대 ‘일반하고 요건 완화’는 가족이나 고용 불안으로 고통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언제 어디서 해고될지 모른다는, 그야말로 찌소리 말고 살라는 것과 다름없다.

심지어 지금 행자부는 임금에 최저임금의 1백50퍼센트 이상인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벼룩의 간도 빼먹겠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 개악은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시장을 더 유연화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다. 그 칼끝이 겨누는 대상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집요함과 새정연의 불철저함, 노사정위 추가 아합 위험 등을 볼 때 결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 10월 24일 비정규직철폐 노동자대회는 노동자들이 투쟁 태세를 갖추고 11월 파업투쟁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돼야 한다.

새정연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임금피크제나 통상임금은 몰라도 비정규직법인은 합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새정연이 반대하면 환노위에서 새누리당이 비정규직 개악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에 기대를 거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연이 비정규직 법 개악을 막을 수 있다고 결코 장담할 수 없다. 관련법 국회 통과를 막는 데서 가장 강만능 방법은 새정연이 환노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거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새정연은 거부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더구나 새정연의 주축은 민주당(또는 열린우리당) 시절 파견법, 기간제법을 만든 당사자들.

윤지우위원회 위원장이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으로 기간제법 통과를 주도하기도 했다. 당시 위원식은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사용자 유 제한 요구(비정규직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 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도록 거부

일지리를 잃는다”며 반대했다.

새정연은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활용’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새정연의 핵심 기반 역시 기업주들이다. 따라서 비정규직 법개악에 일관되게 반대하기 어렵다. 은수미 의원조차 당 지도부가 합의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 같은 광범한 대중적 지지를 받는 운동에서도 새정연은 기소권 요구를 가장 먼저 접고, 새누리당과 아합해 운동의 힘을 빼는 구실을 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약속도 어기고 더 공격하겠다는 박근혜 정부

윤필원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바꿔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겠다고지만,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보면 이런 명분이 순전히 위선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인수위 시절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그의 다른 노동·복지 공약이 그렇듯, 또 다른 먹튀로 기록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이라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2011년 약 34만 명에서 2014년 33만 2천여 명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는 그간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과 무기계약 전환(기간제)이 큰 실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되려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각각 4천 명, 1만 3천 명 증가했다.

정부는 말로는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얘기해 왔지만, 실제로는 공공부문 예산의 효율성을 앞세워 처우 개선을 가로막아 왔다. 정부는 신규 사업과 행정 업무에 기간제를 고용하고, 각 기관들의 인건비와 원가를 통제해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확대했다.

10월 8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자회견에서 노동자들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가 간접고용 노동자 중 일부를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하려 했으나 그마저도 정부가 ‘외주화 기조’를 유지하라’며 반대”했다고 분노를 터트렸다.

게다가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시장 개악 공격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고용을 더 악화

시킬 것이다.

지금도 전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70퍼센트가 무기계약직 전환에서 배제돼 있는데 기간제 사용기간이 연장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는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고용을 안정화한다며 공공부문 용역계약을 장기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놔다. 영원히 용역업체 직원으로 살라는 것이다.

취직리만한 임금도 공격하려 한다. 공공부문 무기계약직에게도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 비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정당화하고, 저임금을 고착화하려 한다.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사용자인 정부의 역할·책임 강화와 비정규직 대책 실효성 보장,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

▶ 9면으로 이어짐



9월 23일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한 홉플러스 노동자들

고용보장·임금인상을 위해 싸우는 홉플러스노조

조명지

‘국내 M&A(인수 합병) 사상 최대 규모’라는 7조 2천억 원대의 홉플러스 매각이 곧 완료될 듯하다.

홉플러스 매각은 단지 자본 규모가 클 뿐 아니라, 2만 명 넘는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문제다. 그러나 홉플러스의 전 소유주인 테스코도, 홉플러스를 인수한 MBK도 노동자들의 고용에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테스코는 언론 보도로 온 세상이 매각 사실을 알 때까지도 노동자들에게 이를 부인했다. 노동자들은 “투기자본에 홉플러스를 매각하지 말라”고 했지만, 테스코는 이를 무시하고 MBK에게 홉플러스를 매각했다. MBK는 이미 써앤엘이나 ING생명 등을 사들이고는 장기적 운영 계획 없이 좋은 값에 되팔기 위해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한 전력이 있다.

MBK 역시 직접 대화에 나와 고용보장을 약속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그나마 MBK가 공문으로라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은 노동자들이 줄기차게 투쟁했기 때문이다.

홉플러스의 두 노조(홉플러스노조, 홉플러스테스코노조)는 지난 6월부터 고용보장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들도 대책위를 구성해 연대했다. 국정감사에 홉플러스 대표이사 도성환과 MBK 회장 김병주가 증인으로 채택되는 등 정치적 압박도 커졌다.

이런 압력 속에서 사측은 현재 진행 중인 임금 협상에서 일부 양보안을 냈다. 사측은 5퍼센트의 임금 인상과, 내년부터 시급제를 월급제로 전환하고 상여금과 성과급 일부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다. 월급제나 기본급 인상은 안

정성 면에서 더 낮고, 약간의 임금 인상 효과도 있다.

홉플러스테스코노조는 임금 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홉플러스노조는 사측안을 거부하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임금 액수가 노동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MBK 측이 여전히 고용보장 약속을 분명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MBK는 인수 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큰 폭의 수익을 약속했다. 홉플러스노조의 지적처럼 “현재 시총금리가 2~3퍼센트대인 조건에서 투자자들에게 무슨 수로 연 5~9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하겠는가? 홉플러스 노동자를 쥐어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확하다.”

안 그래도 대형마트 업계 위기 속에서 지난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이 일부 점포를 폐쇄한 상황에서 매각까지 더하자, 노동자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MBK가 직접 대화에 나와 고용보장을 약속하라는 노동자들의 요구는 중요하고, 정당하다.

더구나 홉플러스 전체 노동자의 70퍼센트에 이르는 기간제,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은, 사측안대로 임금이 인상돼도 월급이 겨우 1백6십만 원 수준이다. 그동안 테스코는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5조 원이 넘는 매각 이익을 챙겼는데,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수준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홉플러스노조는 지난 3년간 투쟁 속에서 꾸준히 자신감과 경험을 쌓아왔다. 특히, 지난 4개월간 매각 반대 투쟁을 벌이면서 조직이 확대되고, 투쟁도 더 전진했다. 지난 9월 23일 파업에서 홉플러스 노동자들이 보여 준 활력은 민주노총 파업 대열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사회적 관심과 지지도 커지고 있다. 이런 점을 이용해 투쟁을 이어간다면 요구를 정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 8면에서 이어짐

도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11월 14일 민중총궐기와 11~12월 결정적인 노동개악 도발에 맞선 총파업에도 기꺼이 앞장”서겠다고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명절휴가비 인상 등 처우 개선과 교육공무직법 제정 등을 요구하며 하반기 투쟁을 조직하고 있다. 11월 14일 민중총궐기에도 2만여 명을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파업투쟁을 통해 차츰차츰 고용 안정성과 노동조건을 개선해 왔는데 올해도 투쟁과 성과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정부가관인 우정사업본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급식비 예산 편성을 요구하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

북한 직총은 자주적 노동단체가 아니다

김영익

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10월 28~31일 평양 남북노동자

통일촉구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민주노총·한국노총은 북한의 조선직업총동맹(이하 ‘직총’)과 함께 이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사회주의자는 계급이 아닌 다른 어느 ‘정체성’(성, 성적 지향, 인종, 민족 등)으로든 화합이 이뤄지는 걸 환영한다. 계급 외의 정체성 갈등은 계급투쟁을 왜곡하고 결국 억압하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애초에 지난 5월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박근혜 정부가 이 촉구대회를 ‘순수한’ 교류 행사가 아니라며 방북을 불허해 행사가 열리지 못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10월에야 남북노동자촉구대회가 열리게 되는 것이다.

분단된 지 70년이 됐지만, 여전히 남북 간에는 자유 왕래는커녕 이산가족 상봉조차 일회성 이벤

트로밖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북의 지배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남북 노동자와 시민의 자유로운 교류를 막아 왔다. 특히, 역대 남한 통치자들은 모두 노동자 촉구대회 같은 일시적 교류 행사조차 자신들의 당면 이익에 맞지 않으면 불허하고 통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직총을 연대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직총은 북한판 민주노총도 아니라 북한 국가기구의 일부로서, 북한 관료와 국가를 통해 집합적으로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것을 돕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직총

1947년 김일성은 당시 ‘북조선직업총동맹’을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일

목론 직총을 통제하는 자들은 각의 주장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런 주장은 “북한의 국영기업소 내 의의 대립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노동자가 인권정권을 상대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서동만, 선인 283쪽). 그래서 북한 당국은 직총의 자주성을 철저히 부정했다.

이것은 북한이 실사 사회주의 사회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주장이다. 레닌은 노동자 국가 하에서도 “노동자들이 그들의 국가로부터 자신들을 방어”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물며 북한은 예나 지금이나 사회주의와 완전히 동떨어진 비민주적이고 착취적인 사회 아닌가.

당시 북한 관료들은 기업 관리 체계로서 지배인 유일관리제를 채택했다. 이것은 북한 당국도 인정하듯이 “국가에서 임명된 책임자에게 전체 일꾼들이 복종”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해방 직후 노동자들이 자주관리를 위해 만들었던 공장위원회 같은 것은 껍데기

도 남아 있지 않았다.《북한 국가자본주의의 형성과 위기: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김하영, 노동자연대) 15쪽)

직총이 노동자들의 이익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직맹(직총)의 임무는 노동자의 생산의무를 실행하도록 보장하는 것이며, 직맹의 업적은 국가에서 위임된 생산계획을 수행하는 데서 그 역할로 평가됐다”(서동만, 같은 책, 326쪽). 명목상의 ‘단체계약(남한의 ‘단체협약’에 해당)은 경제계획 지표 달성, 노동규율 준수, 책임자의 지시와 명령 이행 등 노동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으로 가득 차 있었다.

게다가 이 ‘단체계약’조차 1964년 ‘모범’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한

직총이 가장 열성적으로 추진한 일은 천리마운동, 애국적생산돌격운동 등 심함이 계속된 증산운동에 노동자들을 동원하는 일이었다.

즉, 지난 8월의 남북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 변화와 관계 있지만,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에서도 박근혜가 한국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간파

해선 안 된다.

단위의 직맹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통일뉴스》, 2001년 7월 23일 기사 “북의 조선직업총동맹”). 남한에 노동조합 부위원장인 사장 또는 공장장이고 간부들이 모두 새누리당 당원인 노동조합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런 ‘노조’가 과연 노동자들의 조직인가?

따라서 남북 촉구대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북한 노동자들을 착취·억압하는 북한 관료와 그 일부인 직총을 남한 노동자들이 연대할 대상으로 각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동계급 연대가 아니라 민족 화합에 봉사하는 것뿐이다.

“노동개혁” 문제

예리한 관측자라면 지난 4월 5일 남북 촉구대회를 불허했던 박근혜 정부가 왜 지금 태도를 바꿨는지 따져 볼 것이다. 9월 25일 《통일뉴스》는 박근혜 정부가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의 실무회담을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보도했다. “정부는 그동안 허용해 온 기존인 순수 사회문화 교류를 넘어선다는 판단으로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에 대해 부정적으로 판단해 왔으나 지난

[9월] 22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인 이후 지원 입장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월 22일 박근혜는 ‘노사정위 대타협’을 한 노사정 대표 4인을 청와대 오찬에 불렀던 것이다. 그 자리에서 박근혜는 노사정위 아합을 두고 “한국형 노동개혁의 좋은 모델”이라고 칭찬했다. 그러자 한

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남북노동자통일촉구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고, 박근혜는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즉, 지난 8월의 남북 합의가 박근혜 정부의 입장 변화와 관계 있지만,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을 다른 데로 돌리려는 의도에서도 박근혜가 한국노총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점을 간파



김영익

현대중공업 노조 선거

투쟁적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는 백형록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김지태

현대중공업 노조가 10월 28일 새 집행부를 선출한다.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 조가 출마했다.

기호 1번 백형록 후보 조는 민주파 진영의 단일 후보로, 임단협 마무리, 노동시장 개악 저지, 복지 확대 등을 내걸고 출마했다.

기호 2번 서필우 후보 조는 “친사측”으로 알려진 우파 세력의 후보다. 서필우 후보는 몇 해 전 민주노총의 “강성 투쟁”을 비난하며 “합리적 노동운동”을 자처했던, 이명박 정부의 나팔수 구실을 하기도 했던, 제3노총의 오종쇄 집행부를 세우는 데 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다.

많은 현대중공업의 투사들, 조합원들은 민주파를 대변하는 기호 1번 백형록 선분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선거에 이어 다시 민주파 후보가 당선한다면, 앞으로 더 투쟁을 전진시킬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우파 세력이 다시 고개를 들지 못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이번 선거에 앞서 진행된 민주파 내부 경선에서 백형록 후보는 단연 가장 투쟁적이었다.

예컨대, 그는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에 맞선 대안은 “전국적인 연대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과 우리가 사생결단을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노조 쟁대위에서 민주노총의 9·23 총파업에 동참하자고 주장한 몇 안 되는 지단장(대의원대표) 중 하나이기도 했다.

이 같은 방향은 백번 옳다.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개악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임금, 노동조건,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당면 정세에서 요구되는 투쟁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조가 민주노총 소속이나 아니냐를 따질 때가 아니다.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의 조직과 의식이 발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18년 만에 벌인 파업 결의대회를 마치고 행진하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백형록 후보는 파업 대열을 늘리고 사측의 현장 탄압에 맞서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노조가 호소해 조합원 2백여 명이 모인 ‘현장 실천단’의 부단장을 맡아 기층에서 파업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고, 때로 독립적으로 노조 지도부의 아쉬운 합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투쟁적

백형록 후보는 옳게 사내하청 노동자들과의 연대도 강조했다.

그럼에도 백형록 후보가 정병모 집행부 하에서 벌어진 투쟁 속에서 자신

감과 활력을 갖게 된 전투적 활동가들의 지지를 받고 출마했다는 사실에는 틀림없다. 백형록 후보의 출마는 좀더 투쟁이 전진해야 한다는 활동가·조합원들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였다.

지난 2년 정병모 집행부는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열고 노동자들의 투지를 끌어 올렸다. 지난해 18년 만에 벌인 파업은 많은 노동자들을 고무했다. 올해는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하청 노조 가입 운동을 벌여 인상적인 연대 가능성을 확인시켜 줬는가 하면, 조선업종 노조들의 연대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다.

이 속에서 주로 2000년대 전후로 입사한 젊은 노동자들이 새롭게 투쟁에 나섰다. 이들은 1987년 대투쟁 이래로 온갖 일을 겪은 고참 활동가들과 어우러졌다. 고참 활동가들은 경험을 전수했고 새 세대 노동자들은 활력과 영감을 불어넣었다. 정병모 집행부가 벌인 투쟁 속에서 노동자들은 조직과 의식을 발전시켰고 더 큰 투쟁의 가능성을 키웠던 것이다.

이들은 정병모 집행부를 지지해 함께 싸우면서도, 동시에 그보다 더 투쟁이 전진하기를 바랐다. 일부 활동가들은 정병모 집행부가 파업을 선언했다

가 유보하거나, 불만족스런 잠정합의안을 가져오거나, 사측의 구조조정과 노동조건 후퇴 압박에 더 강력히 맞서지 못한 데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다. 민주파 후보 경선에서 백형록 후보는 바로 이런 투쟁적인 노동자들의 정서를 반영했다.

이번 선거에서 백형록 후보가 큰 표차로 당선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그가 내부 경선에서 주장했던 공약을 실행에 옮기며 적극 투쟁을 호소하고, 활동가들이 이렇게 조성된 기회를 활용해 기층에서 투쟁을 더 전진시킬 수 있길 기대해 본다.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 사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지 말라

10월 5일 현대중공업에서 또 한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그는 이동 중이던 철재 블록에 맞아 12미터 도크 아래로 떨어져 한 달 동안 사경을 헤맸다. 그의 아버지가 현대중공업 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더 비극적이다.

현대중공업 사측은 이윤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장시간 고된 노동으로 내몰고 있다. 한 노동자는 이윤 물이의 끔찍한 현실을 이렇게 말했다. “이번 사고도 한 달 동안 할 일을 일주일만에 다 하게 해서 생긴 겁니다.”

특히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더 열악한 환경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계열사에서 12명이 사망했고 올해에만 3명이 산재로 사

망했다. 이들 모두 사내하청 노동자들이었다.

유족들은 원청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뻔뻔하게도 원청 사측은 아직까지도 직접 나서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사내하청지회는 투쟁에 나섰다. 매일 출퇴근 시간에 홍보전을 하고 저녁에는 행진도 한다. 14일에는 집중 집회를 열었고 활동가들 1백여 명이 모였다. 이 투쟁에 정규직 활동가들도 동참하고 있다.

사측은 이윤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짓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에 맞선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김지태

노동자는 이윤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다 10월 5일 사망한 사내하청 노동자 추모 집회

사진 김지태

사진 김지태



사진 출처 〈노동자세계〉

동일한 사용자에게 맞서는 원·하청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식을 발전시키는 건 투사들의 중요한 과제다.

원·하청 단결 위해 1사 1노조가 더 효과적

백형록 후보는 민주파 후보 경선에서 거둬 원하청 연대를 강조했다. 그는 정규직 노조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옹계 주장했다.

2013년 현재 조선업의 비정규직 규모는 정규직의 294.1퍼센트나 된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사내하청은 정규직의 두 배 이상 많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업에 수많은 노동자들이 산업재해, 고용불안, 저임금 등에 시달리고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은 동료 노동자들의 고통에 눈감아선 안 된다.

둘째, 많은 수의 비정규직의 존재는 정규직의 임금·노동조건을 낮추는 압박 무기가 될 수 있다.

셋째, 미조직 비정규직의 존재는 노조의 힘을 약화시킨다. 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해도 비정규직이 일손을 메우면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하청 연대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둘 다를 위해 중요한 문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요구를 진지하게 제기하며 함께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이는 심화하는 위기 속에서 노동자들을 쥐어짜려는 사측에 맞선 투쟁에서 **사활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조직화

그런 점에서, 올해 상반기에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내하청지회와 함께 ‘하청노조 조직화’에 나선 것은 무척 반가운 일이었다. 특히 2004년 정규직 노조 우파 지도부가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던 역사를 돌아볼 때 중요한 진전이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반기 조직화 시도는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노조 가입 캠페인은 공장을 들췄이게 했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정규직 노조의 투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소수지만 일부는 사측의 단속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정규직 파업 집회에 동참하기도 했다.

문제는 노조에 가입하면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거나 ‘해고하겠다’는 사측의 협박, 탄압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 있다. 이런 위협은 실질적인 것이어서, 많은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조의 ‘법적 대응’ 약속만으로는 선뜻 나서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걱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을 자신의 조합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정규직 노조는 상대적으로 규모도 훨씬 크고 힘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산”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비정규직을 얹잡아 봐서는 소리가 아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하청 규모만 봐도 이 노동자들의 잠재력은 막강하다. 정규직·비정규직이 함께 어깨 겶고 싸울 수 있다면 파업 효과가 몇 배나 배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런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사측의 탄압 등 현실의 여러 제약을 헤쳐나갈 힘과 자신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의 손을 굳건히 잡는 것이 그 방안이 될 수 있다.

물론 이를 현실화하려면 이미 별도로 조직된 사내하청 노조와의 협력이 필요하다. 일부 사내하청지회 간부들은 원하청 노조 통합이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관료적 통제를 강화해 비정규직 투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할 수 있다. 현대차 같은 곳에서는 비정규직 투사들이 노조 통합 시 비정규직의 독자성, 즉 독립적인 교섭권·쟁의권·체결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우기도 했다.

비정규직 활동가들이 종종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그간 몇몇 정규직 노조 지도부가 보여 준 연대 회피와 배신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투사들은 조직화와 연대 투쟁의 진전을 위해 어떤 방법이 더 효과적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때때로 벌어지는 정규직 노조 지도부의 관료적 통제 문제는 노조가 분리돼 있더라도 피해할 수 없는 문제다.

따라서 **기층에서 원하청 연대 투쟁을 조직하고, 이런 힘으로 미덥지 못한 노조 지도부에게 압력을 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분리된 노조보다 **하나의 노조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연대의식을 발전시키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일 것이다.

박설

이주노동자 착취·억압 강화할 “계절노동자” 제도

정선영

최근 정부는 농촌 지역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계절노동자는 90일 이내로만 한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은 연장할 수 없는 그야말로 초단기간 계약 이주노동자이다. 정부는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이 안을 발표했고, 법무부는 올해와 내년 시범 실시를 한 뒤 본격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농번기 인력난 해소”뿐 아니라 “불법체류자 관리 강화”를 도입 이유로 밝혔다. 지금까지 농업 분야의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을 농번기에만 쓰고 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은 이런 농업 분야 고용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게다가 정부는 농업 부문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많이 고용한다며 이 제도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업 분야에서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업 분야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다른 업종보다도 더욱 열악하기 때문이다.

농업 분야 이주노동자들은 극도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려 왔다.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한 실태조사를 보면 농축산업 이주노동자들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2백84시간, 휴일은 이틀뿐이었다. 그런데도 임금은 1백27만여 원으로 시간급으로 계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쳤다.

고용주들은 이주노동자들이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신분증을 압수하기 일쑤였고, 반항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타와 욕설을 일삼았다. 농축산업 이주노동자의 76퍼센트가 욕설을, 15퍼센트는 폭행을 경험했고,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31퍼센트가 성희롱이나 성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축산업의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열악한 조건에 처해 있는 이유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직장 변경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계절노동자 제도는 가뜰이나 열악한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고용허가제에서는 기본적으로 3년 동안 체류가 허용되지만 계절노동자는 단 3개월만 체류가 허용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계절노동자들은 짧은 체류 기간 탓에 언어를 익히지 못한 상황에서 가혹한 착취와 임금 체불, 인권 유린을 겪어도 제대로 항의도 못 하고 한국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계절노동자의 미등록 체류를 막는다는 이유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미 정부도 입국부터 출국까지 전체 이동경



사진 출처 〈이주인권센터〉

계절노동자 제도의 시행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는 농촌 지역 이주노동자들의 처지를 더 악화시킬 것이다.

로를 감시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등의 나라들에서는 계절노동자의 이탈을 막으려고 더욱 엄격한 통제 정책을 쓰고 있다. 사용자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벗어나려는 이주노동자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신분증을 압류하거나 보증금을 받는 등의 일을 벌일 수 있다.

선별

정부는 계절노동자 제도를 통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배타고, 비행기 타고 먼 타향에서 온 노동자들에게 3개월만에 돌아가라는 것은 교통비도 못 벌고 가라는 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마음대로 옮겨 놓을 수 있는 기계가 아닌 상황에서 초단기 계절노동자 제도는 필연적으로 더 많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양산할 것이다.

또, 계절노동자 제도는 정부가 이주노동자들을 분류하고 선별해 차별을 강화하려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부족한 노동력을 보충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늘리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 연구원 등 학력과 경력, 임금 수준 등이 높은 소위 전문인력에게는 영주 허용 요건을 완화하는 등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에 비해 비전문인력으로 분류되는 대다수 이주노동자들은 필요할 때 쓰고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지 내보낼 수 있는 값싸고 유연한 노동

력으로 활용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려는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 이주노동자의 숙련도,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외국인력 분류를 정교화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농업 부문의 가장 열악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고용허가제보다 못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 계절노동자 제도이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이를 통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억압을 강화하려 한다.

심지어 우파들은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최저임금도 아깝다는 공격까지 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권성동은 2015년에 최저임금이 결정된 지 하루 만에 “최저임금 인상이 외국인 근로자에 너무 큰 혜택”을 주고 있다며” 차등지급이나 제외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정말이지 벼룩의 간을 빼어 먹으려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처지가 더욱 열악해지는 것은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 조건이 열악한 노동자들의 처지가 더 나빠질수록 비교적 처지가 나은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도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이주공동행동) 등은 계절노동자 도입 반대 입장을 내고 집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농업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려면 계절노동자 제도 도입을 폐기하고, 작업장과 업종 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연대하자.



사진 출처: Lee Nicholas (블리커)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고 제국주의 전쟁을 벌여 온 노동당에서 긴축 반대 운동과 반전 운동을 대변해 온 코빈이 당 대표로 당선됐다. 노동자들이 개혁주의를 간단히 뛰어넘을 수 없음을 보여 준다.

개혁주의의 양면성을 알아야 한다

차승일

몇 달 전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정치 상황을 분석하며 이렇게 썼다. “영국 국가의 위기로 갑작스럽고 예기치 못한 틈새가 생길 수 있고, 그 덕에 [영국 급진좌파가] 질적 전진을 이룰 수 있다.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영국 자본주의를 격랑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 좌파는 이것이 창출할 기회를 잡을 태세가 돼 있어야 한다.”

대다수 좌파들은 그런 틈새가 노동당 안에서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9월 12일 노동당 대표 선거에서 당 내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압도적 표차로 승리했다. 코빈의 승리는 난민과 이민자에 대한 대중적 연대 물결 속에서 일어났다.

불과 넉 달 전에 치러진 영국 총선에서 노동당이 참패하고, 스코틀랜드에서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이 대중의 긴축 반대 정서의 수혜자가 되고, 잉글랜드에서는 긴축 찬성·이민 반대 세력인 영국독립당이 약진했던 상황을 고려하면 코빈의 승리는 천지개벽까지는 아니어도 꽤나 큰 반전임이 틀림없다. 이런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일부 좌파의 견해와 달리, 코빈의 승리는 유럽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변화에서 영국이 비껴 서 있지 않음을 보여 준다. 경제 위기와 긴축, 기성 정치권의 부패와 혼란은 유럽 곳곳에서 나타나는 일반적 현상이고, 이는 정치 양극화를 낳고 있다. 유럽의 정치 양극화는 한편으로는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 같은 급진좌파의 성장으로 나타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국민당이나 프랑스 국민전선 같은 극우·파시즘의 성장으로 나타난다.

시리자 순간

이런 기본적 동역학은 신노동당*의 기획자이자 코빈을 비난하는 피터 맨

딜슨도 인정하는 바다. “방식과 강도는 다르지만 우리[영국]도 나름의 ‘시리자 순간’을 경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시리자나 포데모스는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도전하며 성장했다. 그래서 그리스의 중도좌파 사회당(PASOK)은 긴축재정 정책을 시행하다가 이제는 사실상 붕괴해 버렸다.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영국에서는 노동당이 그리스 사회당처럼 되고 있다는, 즉 몰락하고 있다는 말이 유행했다. 그러나 이제 영국 급진좌파의 도전은 노동당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영국 노동당 당원은 5월 20만 명 이하에서 9월 중순 34만 2천 명으로 급증했다.

역설이게도, 코빈은 노동당을 잘 이끌겠다는 선거운동을 했어도 노동당이 아닌 대안으로 비쳐졌다. 이런 역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세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 코빈이라는 인물의 독특함이다. (물론 개인의 중요성을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 코빈은 1983년 처음으로 하원의원으로 당선했는데, 당시는 토니 벤이 이끈 ‘벤 좌파 운동’이 시들고 있을 때였다. 그래서 코빈은 그 뒤로 계속 노동당 안에서 주변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층 운동들을 잘 대변하는 훌륭한 아웃사이더 정치인으로 살아 왔다. 겸손하고, 정직하고, 도덕적으로 흠 잡을 데 없고, 정치적으로 견실한 그의 개성은 그의 매력을 더해 줬다.

둘째, 노동당 자체의 성격이다. 신노동당 시절에 노동당은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 게다가 올해 5월 총선에서 참패했다. 그럼에도 노동당은 적어도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역에서는 지지층을 유지했다. 많은 노동자들이 보기에 노동당은 아무리 꼴보기 싫어도 보수당의 공격을 (어느 정도는) 저지할 방패막이었던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노동당의 영향력도 건재하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요인이 지역위원회들의

구실이다. 코빈이 속한 지역위원회를 포함해 노동당의 많은 지역위원회들은 노동자들에게 중요한 쟁점을 둘러싼 운동에 기여해 왔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노동당이 집권한 지자체들이 긴축을 시행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노동당 지역위원회들이 그 문제를 놓고 반대 운동을 벌이고 논쟁을 벌이는 다소 복잡한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다.

셋째, 노동당의 구조가 변하고 있다. 노동당 내 권력 구조는 코빈 리더십의 앞날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므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한다. 1918년 이후 노동당 안에는 세 권력 중심이 있었다. 의원단, 노동조합 지도자들, 지역위원회가 그것이다. 노동당 역사를 보면 지역위원회는 노동당 좌파 운동들 — 1930년대 사회주의자동맹의 운동, 1950년대 어나인린 베번이 이끈 운동,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토니 벤이 이끈 운동 — 의 주요 기반이었다. 그러나 노동당 좌파 운동들은 의원단과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장벽을 넘지 못하고 패배했다.

선거가 가하는 압력을 받으며 국가 기구와 밀착해 중도를 향하는 집단인 의원단과, 노동과 자본 사이를 중재하는 사회계층인 노조 지도자들은 노동당 내 권력 구조에서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구실을 하는 두 축으로, 노동당의 친자본주의적 성격을 확고히 하는 데서 결정적 구실을 한다. 토니 클리프와 도니 글룩스타인은 《마르크스주의에서 본 영국 노동당의 역사: 희망과 배신의 100년》(책갈피, 2008년)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노동당은 ‘자본주의적 노동자 정당’이다. … 노동조합 의식과 의회 개혁주의는 노동당 정치의 핵심이다. 노동당은 의회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애쓰는 노조 관료들의 정치적 표현체이다. 노조 관료는 노동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중재하는 집단이다. 노동당도 생산 현장의 직접 투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다는

점만 제외하면 중재하는 집단이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노동당 지도자들은 때때로 국가를 운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노조 간부들은 결코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의 벤(토니 벤) 좌파 운동이 실패한 배경에는 영국 노동계급의 패배와 신자유주의의 승리가 있었다. 1994년 노동당 대표가 된 토니 블레어는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조화시키려 했다. 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레어는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끊어, 노동당을 미국 민주당 식의 ‘정상적’ 중도좌파 부르주아 정당으로 변모시키고자 했다. 그러나 블레어는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노동조합

알못게도 노동당과 노동조합의 관계를 끊겠다는 노동당 우파의 목표는 블레어 시절과 선을 그었다던 에드 밀리밴드가 2010년 노동당 대표가 된 뒤에 진전을 이뤘다. 벤 좌파 운동이 달성한 노동당 민주화 조치의 하나는 당대표 선출 방식 변화였다. 그 전에는 의원들이 당대표를 선출했지만 이제 의원단·노동조합·지역위원회의 대표로 이뤄진 선거인단이 당대표를 선출하게 됐다. 하지만 무슨 조항속인지, 이

방식은 당내 좌파가 아니라, 당내 온건 좌파(닐 키녹과 에드 밀리밴드)나 심지어 당내 우파(존 스미스와 토니 블레어나 고든 브라운)가 당대표로 선출되는 데 일조했다.

그래도 블레어는 이 방식을 ‘1당원 1투표제’로 바꾸기를 바랐다. 2010년 에드 밀리밴드는 노동조합의 지지를 얻어 블레어 지지자인 자기 형 데이비드 밀리밴드를 꺾고 노동당 대표로 당선했다. 그는 보수당의 집요한 공격을 받으며 노동당 우파에 굴복했다. 그래서 당원, 노동당에 가맹한 노동조합의 조합원, ‘명부 등록 지지자’(일정액을 납부하면 될 수 있다)의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바뀌었다.

‘1당원 1투표제’ 방식은 어찌 보면 시대 변화에 어울리는 것이었다. 신자유주의 시기를 거치며 주류 정당들의 사회적 기반이 허물어지고 사회가 더 원자화된 변화 말이다. 블레어 시기를 지나며 노동당의 지역위원회도 변화를 겪어, 좌파들이나 그보다는 덜 좌파적이지만 전통적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당원이 줄고 꽤 잘사는 중간계급 신노동당 지지자들이 늘었다. 그러나 세 상사가 항상 자기 뜻대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코빈의 당대표 당선에서 드러났다.

코빈은 당원의 49.59퍼센트, ‘명부 등록 지지자’의 83.76퍼센트, 노동조합원의 57.61퍼센트의 지지를 얻어 전체 59.5퍼센트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이 결과를 ‘명부 등록 지지자’의 새로운 유입 덕분이라고만 설명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당원들만 투표할 수 있었더라도 코빈이 승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즉, 노동당 당원 구성 자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5월 총선 패배 이후 가입한 신규 당원들이 그 변화였다.

그럼에도 노동당이 노동계급에 내린 뿌리가 한창때보다 훨씬 약해졌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1952년 노동당

신노동당

1994년 노동당 대표가 된 토니 블레어가 주장한 노선으로, 좌파가 신자유주의를 가까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앤서니 기든스는 ‘제3의 길’을 주장하며 신노동당 노선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다. ‘제3의 길’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비판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제3의 길은 없다: 반자본주의적 비판》(인간사랑, 2008년)을 참고하시오.

예비내각 (Shadow Cabinet)

내각책임제하에서 야당이 차기 집권을 대비해 미리 꾸리는 내각.



1950년대 메이데이 집회에서 연설하는 토니 벤 코빈은 벤 좌파 운동이 겪은 모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당원은 1백만 명이 넘어 지금 당원 수의 거의 세 배였다. 그러나 노동당은 그 사회적 기반이 아무리 약해졌어도 때를 잘 만나면 광범한 저항 물결을 탈 수도 있음을 코빈의 승리가 보여 준다. 코빈 자신도 인정하듯이, 코빈의 선거운동은 그가 대변했던 여러 대중운동으로부터 큰 힘을 얻었다. 긴축 반대 민중 의회와 전쟁저지연합이 대표적이다.

물론 코빈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도 강경 블레어 지지자들은 승리할 수 없었다. 코빈의 지지율이 급등하는 것을 보며 애가 탄 토니 블레어 등이 나서 코빈에게 맹공을 퍼부었지만 역효과만 일으켰다. 블레어 지지자 리즈 켄들은 치욕스럽게도 4.5퍼센트밖에 득표하지 못했다.

압도적 승리로 당대표가 됐어도 코빈의 처지는 그리 녹록하지 않다. 기존의 노동당 내 권력 구조가 흔들리고는 있어도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코빈이 앞으로 맞닥뜨릴 적수는 세 유형이 있다. 의원단, 영국 국가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보수당과 언론, 믿기 힘든 동맹인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그들이다. 코빈이 승리하자, 노동당 의원단 성원들은 (요청도 하기 전에) 예비내각*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거부 선언을 했고, 어떤 의원들은 예비내각의 직책을 맡으면서도 코빈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런 반응을 보면, 그들이 당내 민주적 절차를 얼마나 무시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의원단이 앞으로 “책임성” 문제를 제기하며 코빈을 괴롭히리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코빈이 맞닥뜨릴 둘째 적수는 보수당과 언론이다. 영국 언론계는, 여전히 보수당 친화적인 대기업들의 입김이 세다. 그런 언론이 30여 년 전 토니 벤에

게 했던 것처럼 코빈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갖 악선동을 할 것임은 자명하다.

현 영국 총리이자 보수당 지도자인 데이비드 캐머런이 앞으로 코빈을 어떻게 대할지는 진기업적 유력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가 잘 지적했다. “우선은 코빈이 노동당 대표가 된 사실을 존중해야 한다. 이 나라(영국)에 만연한 반정치 정서와 의회의 한심한 모습이 그 결과를 낳았음을 인정해야 한다. 코빈의 점잖은 성품을 보건대 개인사를 문제 삼으며 그를 공격하는 것은 대중의 반감을 살 것이다.

“그 대신 캐머런은 … 코빈의 정치를 겨냥해 공격할 계획이다. 즉, 영국의 ‘안보’와 가족의 안녕 문제를 집중 제기하며 공격할 것이다.”

영국 국가에 대한 코빈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오를 것이다. 코빈은 노동당 대표가 되면서 차기 총리가 될 수 있는 위치를 점하게 됐다. 코빈은 영국 왕실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제제기에 직면할 것이다. 1924년 처음 집권했을 때 노동당은 기존 질서를 위협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국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코빈은 공화주의자이고 사회주의자이며 반제국주의자이므로 이 문제는 큰 문제다.

이런 세력들에 맞서려면 코빈은 의회 바깥 세력에 기댈 수밖에 없다. 그 세력의 하나는 노동조합 지도자들이다. 많은 주요 노동조합이 코빈의 당대표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그 노동조합들이 코빈을 지지하는 데는 크게 두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노동당 의원단이 조직 노동계급을 깔보며 관심을 두지 않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 그래서 코빈을 지지하면 의원단의 관심을 다시 돌릴 수 있을 것이

코빈이 지지자들을 계속 규합하려면 이런 대의에 입각한 운동을 지속시켜야 한다. 그러면 코빈은 노동당 우파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라고 봤을 직하다. 둘째, 정치적 이유로 코빈을 지지한 노동조합 지도자도 있다. 유나이티드(UNITE: 운수일반노동조합과 통합 기계공전자노조의 통합 노조로 영국 최대의 노동조합)의 사무총장 렌 맥클러스키는 신노동당을 지위 버리고 좌파적 노동당을 “되찾자”고 공공연히 주장하는 인물이다. 맥클러스키에게 코빈의 당대표 선거 출마는 자신의 프로젝트를 가동할 기회였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조합 지도자들의 지지는 코빈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노조 관료는 노동당의 의회 개혁주의를 떠받치는 결정적 사회계층이다. 그들도 선거에서 거두는 성적을 기준으로 코빈을 판단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들은 2020년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해 보수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노동악법들을 폐기하기를 바란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이 코빈에게 온건화 압박을 가하고 있음은 벌써부터 감지된다. 맥클러스키가 코빈에게 좌파 인사인 존 맥도넬을 예비내각의 재무장관으로



그리스 민중연합 “시리자의 문제적 측면들이 민중연합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

임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다행히도 코빈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코빈의 승리가 주로 노조 지도자들의 지지 덕분은 아니었으므로 그는 자신의 노선을 고수할 수 있다. 그러나 코빈이 실제로 그러려면 그를 지지했던 운동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첫째, 1970년대 말 토니 벤 주변에 모였던 활동가들은 결국 패배했다. 대처 치하에서 노동운동이 패배를 겪으며 노동당 좌파가 점차 줄었기 때문이다. 그 뒤로도 남아 있던 노동당 좌파 활동가들이 코빈을 도왔지만, 의원단에 대적하려면 코빈은 노동당 신입 당원들과 지지자로 등록한 많은 사람들이 활동적 당원이 되도록 설득해야 한다. 그러나 코빈을 지지하며 온라인으로 가입한 사람들을 노동당의 일상에 꼬박꼬박 참석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만만찮은 문제다.

이 문제는 또 다른 어려움을 제기한다. 바로 이 잠재적 활동가들을 어떻게 실질적 활동가로 변모시킬 것이냐는 문제이다. 벤 좌파 운동의 약점 하나는 그들이 주로 당내 투쟁에 매몰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들은 노동당 바깥에서 노동자들이 패배를 겪는 문제를 등한시했다. 토니 클리프는 이 모순은 “정치적 상승, 산업적 하락”이라는 말로 요약했다. 이 모순은 결국 노동당 좌파의 패배로 해소됐다. 물론 사람들이 코빈을 지지하게 된 요인은 그가 대변한 더 광범한 대의였다. 간략히 말해, 긴축재정, 전쟁, 인종차별 반대라는 대의였다. 코빈이 지지자들을 계속 규합하려면 이런 대의에 입각한 운동을 지속시켜야 한다. 그러면 코빈은 노동당 우파와 계속 충돌할 수밖에 없다.

셋째, 노동당은 근본적으로 선거를 위한 정당이라는 점이다. 다른 말로 해서, 노동당은 선거에 출마해 승리하려고 존재한다. 코빈은 근본적으로 이 기준에 따라 평가받을 것이다. 어느 노동당 우파 인사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코빈이 내년 스코틀랜드 총선에서 노동당에 새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면, 웨일스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고 잉글랜드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의 입지를 강화한다면, 그는 다음 총선까지 우리를 이끌 자격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면, 우리 당은 행동해야만 한다.”

선거가 가하는 압박은 노동당 좌파 활동가들의 네트워크를 넓히고 사회운동을 지속시키는 데에 계속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 효과는 벌써부터 나타난다. 코빈은 노동당 우파 인사들을 예비내각에 끌어들이려 하면서 유럽연합 탈퇴 찬성 입장에서 후퇴했다. 즉, 총리 캐머런이 “노동자 권리를 공격하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유럽연합 탈퇴 입장을 노동당 당론으로 결정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다. 코빈이 이런 타협의

길을 걷는다면 과거 노동당 좌파 운동이 처했던 상황에 놓일 것이다.

선거에서 코빈의 리더십이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이냐는 긴축이 아닌 다른 경제적 대안을 제시해 대중의 상상력을 사로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와 긴밀히 연결돼 있다. 그가 주장하는 몇몇 정책들, 즉 철도 재국유화와 기업 탈세 단속은 인기가 좋다. 그런데 그의 핵심 거시경제 정책은 이른바 ‘민중의 양적 완화’이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이 지자체 등 여러 기관의 채권과 자산을 매입하고, 그 기관들은 이렇게 해서 마련한 돈으로 생산적 투자를 한다는 구상이다.

우파들도 이 정책을 비판하지만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인 마이클 로버츠도 이 정책을 비판한다. 경제에 돈을 주입하면, 기본적으로 낮은 이윤율 때문에 발생한 경기 침체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 양적완화의 기본적 구상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영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투자를 기피하는 사기업의 손에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마이클 로버츠 비판의 요지이다.

민중의 양적 완화

이런 논란을 보면 코빈의 정책이 개혁주의적이라는 사실이 밝히 드러난다. 사실, 코빈의 승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에서 일어난 새 개혁주의 부흥 물결의 일부로 봐야 한다. 이 새 개혁주의는 여러 면에서 기존 사회민주주의와 다르다. 그러나 새 개혁주의는 기존의 자본주의 권력 구조에 정면으로 도전하지 않은 채로 긴축재정 정책을 중단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불평등을 완화하려 한다.

새 개혁주의는 유럽의 동쪽 끝에서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다. 바로 그리스의 시리자다. 긴축에 반대하며 집권한 뒤 시리자는 자신이 유럽연합과 항구적 대결을 벌여야 하는 처지에 있음을 깨달았다. 7월 5일 그리스에서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62퍼센트가 유럽연합이 요구한 긴축을 거부했다. 그러나 시리자 대표이자 그리스 총리인 치프라스는 겨우 1주일 만에 3차 구제금융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그전보다 더 혹독한 긴축을 수용했다. 이 문제를 놓고 시리자는 분열했고 치프라스는 9월 20일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그 결과 그는 다시 총리가 됐지만, 사실 이 과정에서 유럽연합이 얻은 것이 더 크다.(이 비극에 대해서는 〈노동자연대〉웹사이트에 실린 ‘[그리스] 시리자는 왜 긴축에 굴복했는가?’를 참고하십시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많은 급진좌파들의 기이한 기억상실증이다. 불과 몇 달 전에만 해도 많은 좌파들은 ‘각국의 시리자’를 건설하기를 바랐다. 그러려면 원조 시리자에서 일어난 일을 곱씹어 봐야 한다.

▶ 뒷면으로 이어짐

공무원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전국적인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박천석 공무원노조 마포구지부장, '사수넷' 회원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공무원연금 개악에 이어 이제 저성과자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로 고용과 임금까지 위협하고 있다. 정부의 계획에 따르면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단” 퇴출제를 빠르면 10월 말 시범 실시하고 내년에 전면 확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에 게는 퇴출제 도입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고위직 퇴출제 시행을 통해 명분을 쌓고 나면 곧이어 하위직 퇴출제 추진을 시도할 것이다. 공직사회의 성과주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면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도 강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006년 도입된 이후 유명무실했던 “고위 공무원단 적격심사” 제도를 강화해 실질적인 퇴출제로 운영할 계획이다.

10퍼센트 이상을 ‘미흡’과 ‘매우 미흡’으로 분류하도록 강제했고 ‘매우 미흡’은 퇴출 대상이다.

그러나 정작 평가 기준은 모호하다. 인사혁신처는 “정책 실패”, “태도·자질”, “개인 비위”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태도·자질”에는 “복지부동 등 소극 행정·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이라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이런 기준은 실제로 부정과 부패의 운상인 고위공무원을 퇴출시키는 데에는 별 쓸모가 없는 한편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만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비민주적인 위계질서야말로 바로 부패의 원인이기도 한 데 말이다.

한편 정부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



공무원 노동자들의 투쟁은 박근혜의 노동 개악에 맞선 전체 노동자 투쟁의 일부다.

원’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강화 방안을 내놴다. 이 내용에 따르면 “최하위 등급자는 6개월간 호봉 승급 제한”을 뒤 사실상 ‘처벌’을 받게 된다. 한번의 승급 제한은 퇴직 때까지 영향을 줘 상당한 금액의 임금 손실이 생긴다. 동시에 성과 미흡자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재평가해 “복귀 또는 재배치”하게 된다.

승진에서도 “경력점수 비중을 대폭 축소하여 실적경쟁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임용, 특별승급”도 도입하려 한다.

이런 인사혁신처의 퇴출제와 성과주의 강화 추진은 박근혜가 공공부문과

노동계급 전체에 적용하려 하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 ‘성과연봉제 도입’과 쌍을 이루는 정책이다.

죽음을 부르는 퇴출제

일상적인 성과평가와 이를 통한 퇴출제가 얼마나 끔찍한지는 KT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KT는 ‘고과연봉제’라는 이름으로 성과연봉제를 시행했고, 최하위 고과를 2년 연속 받으면 대기발령을 거쳐 면직까지 가능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정 비율이 정해진 인사사고 등급으로 임금이 결정되면서 살인적인 실적경쟁에 내몰린 직원들은 매년 수십

명씩 각종 돌연사와 자살 등으로 죽어가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된 퇴출 프로그램 사례를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예컨대 수원시가 도입한 ‘소통 2012’라는 퇴출 프로그램 때문에 퇴출 대상에 선정된 38명 가운데 2명이 자살했다. 38명 가운데에는 업무처리 속도가 느다는 이유로 퇴출 대상에 꼽힌 장애인도 포함돼 있다.

게다가 수많은 종류의 업무를 단일한 형식적 잣대로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전입담당을 맡은 직원과 청소업무를 맡은 직원의 ‘성과’를 어떻게 비교할 것인가! 설사 똑같은 제증명서

발급 업무를 하더라도 근무지 환경에 따라 발급 건수는 천지차이다. 그러나 ‘성과’를 강조하게 되면 제증명서 발급민원이 적은 동주민센터는 폐쇄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 평가 기준의 모호함은 결국 지역주민을 만족시키기보다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 권한 강화로만 이어질 게 뻔하다. 따라서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지키는 투쟁이기도 하다.

전국적 항의 행동

정부는 노조가 저항 태세를 갖추기 전에 신속하게 밀어붙이려 한다. 지난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을 2주 만에 입법예고 했다. 조만간 퇴출제 관련 규정 개정안도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도 빠르게 항의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 지난 몇 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노조 지도부가 선거를 통해 들어섰으니 신임 지도부는 퇴출제에 맞서 전국적인 항의 행동 계획을 내놔야 한다. 이번 노조 지도부 선거에서 신임 지도부가 활동가들의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높은 찬성율로 당선한 것은 조합원들이 퇴출제와 성과체계 강화 등 박근혜 정부의 고용과 임금 공격에 맞서 싸우길 원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당선한 김주업 집행부는 퇴출제, 성과체계 강화, 노조탄압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앞면에서 이어짐

또, 그 일이 각국 좌파에 함의하는 바는 무엇일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다. 리오 패니치와 슬라보에 지젝 같은 좌파 학자들은 치프라스를 옹호한다. 그 근거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을 보면 좌파의 전진이 평탄한 상승 곡선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논쟁과 갈등과 심지어는 분열을 수반하는 양극화 과정일 것임을 알 수 있다.

자본이 가하는 압박을 받으며 개혁주의 정부들이 자기 정책을 뒤집은 일은 많다. 대표적 사례가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중반 영국의 해럴드 윌슨 노동당 정부와 1980년대 초 프랑스의 프랑수아 미테랑 사회당 정부이다. 개혁주의 정부를 순치시키는 데 흔히 이용되는 방법이 자본을 해외로 빼돌려 환율 위기를 일으키는 것이다. 물론 그리스는 자체 통화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방식이 이용된다. 바로 유럽중앙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제한해 예금 대량 인출 사태를 일으키고 대출을 중단해 전체 은행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것이다. 이것이 7월 초 그리스에서 일어난 일이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환율 위기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강력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 타격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대항할 방법은 있었다. 예금 인출 제한 조치에

도 불구하고 그리스 대중은 7월 5일 국민투표에서 반대표를 찍었다. 국민투표 당시 그리스 재무장관 바루파키스는 장관직을 내놓으며 사실 ‘플랜B’를 준비하는 팀을 꾸렸었다고 밝혔다. ‘플랜B’는 “유럽중앙은행의 난폭한 행동의 결과 은행들이 문을 닫은 상황에서 숨 쉴 구멍을 만들기 위해 대체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총리 치프라스는 바루파키스에게 ‘플랜B’를 실행할 권한을 결코 주지 않았다. 문제는 기술적 수단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굴복이 아닌 대안을 추구하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굴복이 아닌 대안을 계속 추구하려면 국민투표에서 표현된 그리스 대중의 긴축 거부 의사를 훨씬 더 크고 오래 지속되는 대중운동으로 전환시켰어야 한다.

시리자는 새로운 종류의 반자본주의 정당을 표방했다. 그러나 현실에서 치프라스는 그리스 사회당이 20년에 걸쳐서 한 일을 불과 6개월 만에 재현했다. 바로 좌파 개혁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로 변모하는 것 말이다. 그리스 사회당은 그 변모 과정에서 그리스 노동계급을 위한 정치적·사회적 개혁을 어느 정도 달성했다. 그러나 시리자 정부는 실질적인 개혁은 하나도 이루지 못했고 이제는 더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처지다.

2기 시리자 정부의 앞날은 순탄치 않을 것이다. 치프라스는 조기총선을 위한 선거운동 과정에서 우파 정당인 신민당에 화력을 집중했다. 신민당은 7월 5일 국민투표 때 찬성 운동을 벌이다 참패하고 혼란을 겪고 있었다. 9월 20일 총선 투표율은 역대 최저였고 시리자는 30만 표를 잃었다. 그중 절반 정도는 민중연합(Popular Unity)으로 갔다. 민중연합은 시리자 좌파였던 좌파연대(Left Platform)가 시리자를 탈당해 8월에 창당한 정당이다. 민중연합을 포함해 시리자 바깥의 좌파는 모두 합쳐 9.46퍼센트를 득표했다. 이것은 치프라스가 유럽연합과 맺은 악마와의 계약에 맞서 저항을 벌이는 데서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민중연합

몇몇 급진좌파들은 슬그머니 민중연합 지지로 옮겨갔다. 그러나 전 에너지부 장관 파나기오티스 라파자니스 등 민중연합 지도자들은 1기 시리자 정부에 있을 때 새 정당을 설립하기 위한 초석을 놓지 않았다. 치프라스가 국민투표 결과를 어기려 할 때 그들은 장관직을 내놓으며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기보다는 의회 내 수단(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하는 것)에만 의존해 대응하면서 치프라스가 자신들을 해임하

기를 기다렸다.

민중연합은 옹계도 그리스가 유로존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시리자의 문제는 시리자 지도자들이 유로존 탈퇴를 거부한 것 이상의 문제다. 심지어 민중연합의 어느 지지자조차 이렇게 말했다. “시리자의 문제적 측면들 — 관료적 정치문화와 강령의 개혁주의적 성격 — 이 민중연합 안에서 재현되고 있다.”

시리자가 실패한 원인을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 그리스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주요 교훈 하나는 언론 노출과 의원직 확보라는 거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새 좌파의 힘은 사회운동에서 나온다. 그리스에서 반긴축 좌파를 다시 건설하는 데서든, 영국에서 코빈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시키는 데서든, 출발점은 의회가 아니라 거리와 일터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보다 어디에서 조직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과거에 혁명적 좌파였던 사람들도 노동당 입당 물결에 휩쓸리고 있다. 지금 영국 분위기는 2012년 5월 그리스 총선에서 시리자가 약진했을 때를 연상시킨다. 당시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은 시리자에 가입하지 않고 반자본주의 좌파연합 안타르시아를 건설해 선거에 독자

출마했다고 해서 많은 좌파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선택이 옳았다. 안타르시아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해서 ‘고립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7월 5일 국민투표 때 반대표 던지기 운동을 일으키는 데서 안타르시아가 큰 구실을 해 시리자 사무총장이 사실상 감사 인사를 할 정도였다. 그리고 안타르시아는 시리자로부터 독립적으로 있었던 덕분에 치프라스의 배신에 즉각 대응할 수 있었다. 반면 좌파연대는 주저하고 얼버무리가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했다.

시리자는 자본주의 권력 구조와 정면 대결하는 과정에서 굴복했다. 코빈은 그 자본주의 권력 구조와의 대결을 이제 막 시작했다. 좌파는 우파에 맞서 코빈을 계속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독자적 조직을 유지하면서 그래야 한다.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의 개혁주의 비판은 그리스에서 다시 한 번 타당성이 입증됐다. 우파와 맞서 투쟁하는 데서, 그리고 코빈이 우파에 타협하며 스스로 몰락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데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 이론은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다.

* 이 글은 다음의 논문을 많이 참고해서 썼다. Alex Callinicos, ‘Two faces of reformism’, International Socialism 148(Autumn 2015).

박근혜의 고등교육 ‘개혁’

대학 노동자와 교수, 학생에게 고통전가 중단하라

이야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개혁’정책의 핵심 기조는 산업 수요에 맞게 중 고등교육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대학구조개혁평가와 각종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학과와 정원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이 고등교육 ‘개혁’의 핵심 중 하나다.

정부는 취업률과 학사관리 엄정화, 정원 조정 등을 지표로 대학을 5등급으로 나뉘, 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강제하고 재정 지원을 제한해 왔다. 그리고 ‘산업 수요’에 맞춘 학과를 특성화한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대학 ‘특성화 사업’, 기업과 연계 수준이 높은 대학에 지원금을 주는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을 추진했다. 이제는 인문·사범·예체능 계열의 정원을 줄이고 ‘산업 수요’가 높은 공과계열의 정원을 늘리면 지원금을 주는 ‘산업수요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까지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으로 대학은 더한층 ‘취업사관 학교’로 변모하고 있다. 취업률이 낮은 학과는 정원이 줄거나 통폐합되고, 취업과 무관한 수업들은 폐지되거나 취업의 필요에 맞춰 교과목과 내용이 달라진다. 정부가 대학 평가 기준에 ‘학사관리’지표를 포함하자, 대학들은 너도나도 상대 평가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퇴출되는 대학의 교수와 직원들은 정리해고 된다. 통폐합된 학과의 교수들도 임금이 삭감되거나 퇴직을 종용받는다. 정원이 감축된 대학들은, 교직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기존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한신대처럼 연구비와 학생 복지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학사 조교 1명에게 4개 학과의 업무를 다 맡겨서 행정이 마비되는 일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고통전가를 법제화해 밀어붙이려 한다. 9월 20일 교육부 장관 황우여는 “정기국회에서 대학구조개혁법과 사학연금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 이날 국·공·사립 교수 1천여 명은 정부의 시장주의적 대학 정책에 항의했다.

대학구조‘개혁’법: 비리 사학의 ‘떡튀’ 보장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학평가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려 한다.

이 법이 통과되면 부정비리 사학들은 대학을 정리하면서 잔여 재산을 ‘떡튀’할 수 있게 된다. 학교법인이 자진

해산할 경우 학교법인의 잔여 재산 일부를 설립자에게 되돌려 주고 증여세 등도 면제해 주는 게 이 법의 골자다. 또, 대학 퇴출시 대학의 잔여재산을 공익·사회복지 법인 등으로 전환해 사학법인이 가져갈 수 있도록 보장하고,

대학이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 재산으로 전환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렇게 되면 상지대, 청주대, 서남대 등에서 비리 사학재단들의 횡포도 더 심해질 것이다.

시간강사법: 비정규 교수의 대량 해고 예고

대학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시간강사들이 대량 해고되고 있다. 대학들이 전임교원확보율을 높이려고 소수의 강의전담교원(비정규직)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강의를 맡아주는 대신 훨씬 많은 수의 시간강사를 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간 시간강사의 일자리는 1만 5천 명 분이 줄어들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시간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비정규 교수들의 처지를 더 버랑 끝으로 내몰 것

이다. ‘시간강사법’은 강사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규정하면서도 실질적 교원 지위는 주지 않는 기만적인 법안이다.

그런데도 이 법에 따르면, 주당 9시간 이상 강의하는 ‘강사’는 교원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데도 교원확보율 산정 시에는 ‘교원’으로 인정된다. 이렇게 되면 대학들은 필요한 만큼 정규직 교원을 충원하지 않고 그만큼을 비정규직 강사로 채울 게 뻔하다.

뿐만 아니라 대학들이 교원확보율에

포함되는 강사를 충원하려는 과정에서 일부 강사들에게 강의를 몰아줄 수 있다. 더한층의 대량해고 사태가 예고되는 것이다.

이에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시간강사법 폐기와 대체입법 마련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전국교수대회에 모인 교수들도 시간강사법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는 새누리당뿐 아니라 이 법을 반대하지 않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항의하고 있다.

사학연금법 개악: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털 받아라

대학 교수와 직원들은 이명박 정권 때부터 거의 10여 년간 사실상 실질임금이 삭감돼 왔다. 그런데 올해 공무원 연금이 개악되면서 사학연금도 개악될 상황이다. 사학연금의 급여 종류와 지급기준 등은 모두 공무원연금법의 해당 조항을 준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8월 28일 새누리당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교문위에 발의했다. 사학연금 역시 공무원연금처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더 늦게, 털 받도록 개악하려는 것이

다. 사학연금이 개악되면 대학 교직원들뿐 아니라 사립학교의 교사들, 사립대 병원 노동자들 모두 피해의 당사자가 된다.

저성과자 해고

한편, 대학 노동자들은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도 크게 분노하고 있다. 특히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개악안은 대학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진행되면서 대학

의 평가 지표를 올리기 위한 일이 직원들에게 전가되면서 성과를 바탕으로 한 경쟁도 더 강화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저성과자에 대한 일반해고가 가능하게 되면 대학 노동자들은 언제라도 해고를 당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노동개악 중단, 대학구조조정 폐기, 사학연금 개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14일 ‘생존권 사수와 대학 공공성 쟁취’를 위한 대학 노동자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조직하고 있다.

철도 파업 당시의 민주노총 침탈 관련 재판 방청기

고압적 분위기에도 당당하게 정당성을 주장하다

지난 10월 14일, 2013년 12월 철도 파업 기간 중 경찰의 민주노총 침탈에 맞서 싸우다 연행된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박혜신 동지와 청량리 기관차 승무지부 동지들 5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나는 이 재판을 방청했다.

박혜신 동지와 철도 노동자 동지들은 법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박혜신 동지의 최후 진술은 법정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고압적인 법정 분위기 속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박혜신 동지의 모습이 정말 놀라웠고 대단해 보였다.

박혜신 동지는 “소방관까지 동원한 폭력적 침탈”과 “1백16억 원 대의 가압류, 1백50억 원 대의 손해배상 청구” 등 뒤끝 있는 정부의 대응을 폭로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 당시에 느꼈던 분노가 다시금 솟구쳤다. “수색영장이 분명히 기각되었음에도 무리하게 진행”된 폭력 침탈이었다며 누가 진짜 불법을 자행했는지 되물었을 때에도 정말 통쾌했다. 또한 지금도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의 임금, 일자리를 훔쳐가려는 노동시장 구조개악과 역사를 훔치려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의 민낯을 낱낱이 폭로할 때 정말 속 시원했다.

특히 “나와 같은 대학생들에게 철도 파업은 억눌린 청춘의 불만을 표출할 수 있는 희망적 창구였다” 하고 주장했을 때 나는 눈물이 울컥할 정도로 감명받았다.

박혜신 동지는 “철도노동자들과 함께 불법적 침탈에 맞서 저항했던 저의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와 철도 노동자들은 무죄입니다”라며 최후진술을 마무리지었다. 최후진술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자연스레 큰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신경질

박수갈채가 터지자 이제까지 호의적으로 구는 척했던 판사가 태도를 싹 바꿔 어처구니없는 훈계질을 하기 시작했다. 판사는 “여기가 시위장소입니까? 공청회 장소입니까?” 하고 신경질을 부렸다. 심지어 박혜신 동지에게 “표현이 걸려져야 한다”고까지 주제넘은 훈수를 뒀다. 이런 식의 개입으로 그 다음 노동자들의 발언도 어느 정도 통제하고 방청 온 우리의 사기도 떨어뜨리려는 속셈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다음 이어진 철도 노동자들의 발언은 이러한 판사의 시도를 좌절시켰을 뿐 아니라 방청석에도 큰 영감을 줬다.

5명의 동지들이 호명되는 순으로 발언했다. 첫 동지는 “밤에 6층에서 사무실을 지키고 있었다. 그러다 식사를 하러 내려왔는데 갑자기 유리파편에 맞고, 최루액을 너무 뿌려 마스크 쓰고 있다가 연행됐다” 하고 진술했다. 그때 당시 긴박한 상황이 느껴졌다. 그 후 3명의 노동자들이 “저는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습니다”라며 당당하게 주장했다. 그러자 판사는 “다섯 분도 박혜신 씨 말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 (최후진술을) 생략한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노동자들은 입을 모아 “예”라고 대답했다. 이때 정말 전율이 일 정도로 크게 감동

받았고 철도 파업을 지지해 온 내가 옳았다는 것이 입증된 것 같았다.

박혜신 동지가 최후진술에서 이야기했듯이 악랄한 박근혜 정부는 철도 파업 이후로도 노동시장 구조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등 ‘법과 원칙’을 차근차근 어겨나가고 있다. 세월호 참사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정에서 철도 파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는 박혜신 동지와 철도 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이 싸움에 지지와 관심을 보내자.

이지원

본지 웹사이트에서 박혜신 동지의 최후진술문과 방청기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지배계급의 이데올로기 계급투쟁

백은진 역사교육 전공, 대학강사

10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행정예고한 이후로도 국정화 반대 선언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정화 강행 의사를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는 19일 교육부 차관을 경질했다. 2009년에 그가 국정화 정책을 비판한 논문을 썼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텔레비전 광고도 시작했다. 기존의 검정 《한국사》 교과서 일부가 유관순을 다루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올바른 역사 교과서”, “대한민국 헌법 가치에 충실한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셀프 디스”다. 기존의 검정 교과서는 누가 통과시켰는가? 바로 교육부다.

검정 교과서 체제에서도 정부는 교과서 집필 기준과 검정 통과 기준을 제시하며 교과서를 검열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이것도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현재는 지배하는 자들의 의도

조지 오웰은 1949년 출판한 《1984년》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했다. 즉,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고자 과거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이 ‘역사 전쟁’을 선포한 의도를 알려 준다.

첫째, 이들은 과거뿐 아니라 현재의 ‘친일’과 ‘친미’도 정당화해 현재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 미국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려 한다. 즉, ‘과거사에 연연’하지 않고 미국·일본과 함께하는 친제국주의적 정책을 더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으로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이던 나경원은 한미 관계, 한일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만들어 가려면 역사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과거사 문제와 다른 문제를 “분리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2015년 3월 6일 YTN 인터뷰)

둘째,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해 현재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 한다. 우파들은 이승만과 박정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켜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1925년 이승만이 임시정부에서 탄핵돼 쫓겨난 일, 1948년 5·10 선거에서 동대문갑 선거구로 출마하려던 상대 후보의 등록을 경찰력을 동원해 무효화한 일, 1956년 대선에서 자신의 경쟁자로 떠오른 조봉암을 사형시킨 일만 봐도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짓밟았는지 알 수 있다.

4·19 혁명을 쿠데타로 짓밟고 등



주도력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국정화 반대로 표출되는 이때 노동계급이 단호한 주도력을 보여 주면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10월 17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범국민대회 모습.

강한 박정희는 1972년 유신을 통해 사실상 종신집권을 선포했고, 권위주의적 탄압을 강화하며 남한 사회를 준전시(準戰時) 상황처럼 통제했다. 박정희는 주로 “안보 위기”를 명분으로 권위주의적 탄압을 정당화했다.

이승만과 박정희의 독재를 정당화하겠다는 것은 현재의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투쟁의 기억을 지우고 착취와 억압의 역사를 은폐해 노동계급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지배를 강화하려 한다. 특히, 착취하는 계급과 착취당하는 계급 사이의 이해관계 갈등을 더욱 은폐하고 싶어 한다.

뉴라이트 성향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권희영은 “민중이 역사를 만들어 나간다는” 사관을 버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에도 “자본주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업가이므로 그 역할을 정당하게 인정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5년 10월 14일

자유경제원 주최 세미나)

또한, 새누리당 정부는 4·3 항쟁이나 10·19 여수순천항쟁 같은 저항의 역사를 지우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벌어진 사회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바꿔 왔다.

노동계급을 향한 공격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며, 착취와 억압을 은폐하고 투쟁의 기억을 지우려는 것은 모두 궁극적으로 노동계급과 계급투쟁을 겨냥한 공격이다.

우리는 경제적 경쟁과 군사적 충돌, 대량 학살을 낳은 제국주의와 전쟁에 맞서 싸운 노동계급의 투쟁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세계 역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시위·결사의 자유, 노동3권 등이 오랜 시간 동안 진퇴를 거듭해 온 살벌한 전투 속에 노동자들이 쟁취해 온 것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에 맞선 “역사 전쟁”은 계급투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특히,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현재 “노동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계급에 대한 공격을 막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박근혜 정부가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국정화 강행에 성공한다면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는 데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직 노동계급의 과제

여당은 또한 국정화 문제를 우파 결집에 이용하려고 혈안이 돼 있다. 김무성은 “역사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며 우파가 단결하면 내년 총선에서 1백80석을 보장할 수 있다고 큰소리를 쳤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국정화를 반대한다. 그러나 이들의 반대는 주로 국정화가 친일파·독재를 미화해 박정희의 명예를 회복시켜 현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본가들(비주류 일지라도)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 교과서가 담고자 하는 미국 제국주의 지지, 노동자 착취 은폐 등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정부의 국정화 시도에는 가르칠 내용에 대한 통제뿐 아니라 교사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 전교조에 대한 공격도 깔려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김정은은 전교조가 ‘좌편향’이므로 역사 교과서 집필에서 배제하겠다고 말했다. 보수 언론들은 “교실에 넘치는 편향 교육 … 교사가 더 문제”(TV조선), “좌

편향 교사·저질 수업 이대로 두고 봐야 하나”(《동아일보》) 같은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또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권희영은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반체제적 민중사관의 투사 및 동조자로” 만들고 있다며 “민중사관 역사 연구자, 교사들의 카르텔을 깨야만” 하고 이것이 바로 정부의 과제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따라서 민주노총과 전교조 등 조직 노동자들은 국정화 반대 운동의 수동적 지지자가 아닌 능동적 주도자 구실을 해야 한다.

일부 소심한 사람들과 너무 온건한 활동가들은 전교조가 연가 투쟁 같은 집단 행동을 벌이면 정권 VS. 전교조의 대립 구도가 형성돼 다른 사회 세력이 이 운동에서 발을 뺄 거라고 주장한다. 그리 되면 일껏 오랜만에 무르익기 시작한 운동의 기반이 좁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국정화 반대로 나타나고 있는 이때 오히려 노동계급이 단호한 주도력을 보여 준다면 광범한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 2013년 12월 철도 파업은 그다지 전투적이거나 급진적이지 않았는데도 대학생 등 광범한 소외 집단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야권 정치 지도자 회의’는 노동계급의 힘이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주도력을 강화시키는 방안이다. 민주노총이 이 제안을 환영하고 나선 것도 우려스럽다.

좌파 활동가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와 “노동개혁” 반대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결합 좌파는 국정화 저지 투쟁 속에서 “노동개혁” 반대를 결합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